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Event Data 분석기법 활용

인쇄/1998년 4월 24일

발행/1998년 4월 27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37-0

5,500원

연구보고서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Event Data 분석기법 활용

박 종 철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는 event data분석기법을 활용하여 1984년부터 1997년까지 로이더통신에 보도된 북한 관련 보도를 통계처리하여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상호관계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대상 기간을 4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북한 관련 대외관계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양자관계에서 갈등·협력양상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양자관계는 양자간 상호관계와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event data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상호관계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event data의 분석기법으로 KEDS/PANDA기법을 활용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7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을 ① 1984. 1~1988. 9: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② 1988. 10~1993. 2: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③ 1993. 3~1994. 10: 북한핵개발과 협상, ④ 1994. 11~1997. 12: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별 특징에 따라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갈등·협력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양자관계를 양자간 상호관계와 양자간 일방적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1.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일반적 특징

첫째, 북한 관련 보도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월 평균보도수는 북한핵위기 기간동안 가장 많았다. 그 이후 북한의 위기와 포용정책기간에는 핵위기 기간보다 평균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첫번째나 두번째 기간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핵문제로부터 북한의 위기 및 체제전망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별 분포를 보면,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의 2위는 남한이며, 그 다음은 미국, 일본, 국제기구, 중국, 러시아의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적대국이었던 미국이 주변 4국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소련(러시아)은 북한 관련 event의 소스 및 대상으로서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셋째, 이슈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것과 군사적 위협 및 테러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에는 일반적 외교관계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갈등적 상황이 여전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 및 통일문제에 대한 비중은 외교관계 및 군사적 갈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통일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해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주변 4국

및 남한은 경제문제보다는 통일문제에 대해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골드스타인(Goldstein)지수를 활용하여 갈등·협력양상을 지수화한 결과, 전체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2.54이며, 평균 협력지수는 2.80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면에서는 협력양상의 정도가 갈등양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2. 기간별 갈등·협력 양상

1984년부터 1997년까지를 4기간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갈등·협력양상의 변화추세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기간은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갈등정도와 협력정도가 다 같이 낮았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한적이었으며 갈등적 사건이나 협력적 사례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정도가 일·북관계 및 미·북관계보다 낮은 이유는 1984년 북한이 남한에게 수재구호물자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 갈등이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협력양상은 사회주의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북관계 및 러·북관계가 다른 양자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북관계 및 러·북관계의 사례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북 및 러·북간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한다.

두번째 기간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갈등지수는 전체 평균 갈등지수보다 낮고, 협력지수는 전체 평균 협력지수보다 높았다. 이 기간동안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갈등이 가장 높은 것은 대화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

이가 드러났으며, 양측이 이것을 협상전술차원에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동안 미·북간 협력양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부터 미·북간 접촉을 위한 양측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기간은 북한핵위기 및 핵협상 기간이다. 이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전체 기간중 가장 낮고, 협력지수는 전체 평균협력지수 수준이다. 북한핵개발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에 수반된 위협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지수는 전체 기간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협력도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표면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핵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갈등관계와 높은 협력관계가 유지된 것이 주목된다.

네번째 기간은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대북포용정책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갈등지수 및 협력지수는 전체 기간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갈등과 높은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핵문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해소된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요인이 억제되지 않고 표출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 양상의 전개에 따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견해차이와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돌발적 변수로서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은 이 기간동안 갈등요인을 증가시킨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네번째 기간에서 남북한간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간 공식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3. 양자간 갈등·협력 관계

다음은 다섯 쌍의 양자간 갈등·협력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양자관계는 양자간 상호관계와 다른 한측에 대한 한측의 일방적 관계로 구분되었다. 양자간 상호관계는 양측간 상호작용의 전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방적 관계는 다른 한쪽에 대한 한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미·북관계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 관련 양자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 상호관계는 양자간 갈등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북관계는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동안 갈등 event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갈등지수는 가장 낮고, 협력지수는 평균치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미국과 북한은 갈등적 입장을 많이 표명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으며, 타협적인 제안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미·북관계에서 갈등지수가 가장 높고 평균치 이하의 협력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미·북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미관계가 미국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향적이다. 북한의 일방적 대미관계는 핵협상 기간이던 세번째 기간동안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높은 협력지수를 나타냈으며,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낮은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대미관계는 핵협상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의 협력지수를 나타내고,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동안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낮은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일·북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관계는 국교정상화논의가 시작된 이후 갈등지수가 감소하고 협력지수가 증가했으며, 핵위기 기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갈등과 협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 갈등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양자간 실질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북한의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일관계가 일본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갈등지향적이다.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 대일관계의 경우, 국교정상화논의 기간인 두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높은 협력지수를 나타낸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과 가장 낮은 협력이 나타났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에서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 대북관계의 경우, 국교정상화논의 기간에 가장 높은 협력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에 갈등지수가 가장 낮고 평균치의 협력지수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북한핵 협상과정에서 국외자였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일본의 대북관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지수와 평균치를 상회하는 협력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본의 대북갈등이 점차 많이 표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중·북간 상호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비공개주의 및 양자관계의 비공개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중국은 핵위기 기간에도 낮은 정도의 갈등을 유지했다. 그리고 양자간 상호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

간동안 가장 높은 갈등지수 및 협력지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상호작용 event의 수나 갈등·협력지수의 두가지 기준에서 모두 북한이 중국보다 협력지향적이다. 북한의 일방적 대중국관계를 살펴보면,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에서 높은 갈등요인과 높은 협력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 대북한관계를 보면, 특히 대북포용정책추진 기간인 네번째 기간동안 갈등 event가 전혀 없고 협력요인이 최고에 이른 것이 주목된다.

넷째, 리(소련)·북관계는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북한과 러시아(소련) 양자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중·북간 상호작용 event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작용 event수가 적은 것은 중·북한의 경우에서와 같이 양자간 관계가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는다는 점외에도 실질적으로 양자간 관련 이슈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러시아(소련) 양자간 상호관계는 갈등 event가 협력 event보다 많지만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제한적이다. 지수면에서 보면, 협력양상이 상대적으로 갈등양상보다 높다.

북한과 러시아(소련)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상호작용의 event수나 지수면에서 북한의 대러관계가 러시아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 대러시아(소련)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러 갈등지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기간에 최고치에 달해서 북한이 소련사회주의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북한핵위기 기간동안 북한의 대러관계는 낮은 수준의 갈등을 보였다. 특히 북한핵위기 이후 협력 event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갈등적 입장을 나타낸다.

러시아(소련)의 일방적 대북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북한핵개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는 대북영향력 확대를 위해 협력지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남북한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는 다섯 쌍의 양자관계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관련 event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남북한간에는 갈등 event수가 협력 event수보다 많지만, 실질적으로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간 정도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높은 수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협력도 병존하는 이중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간 공식대화가 진행되었던 두번째 기간동안 갈등지수가 현저하게 낮지는 않았으나, 협력지수는 최고에 달했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갈등지수가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갈등지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협력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최고치의 갈등과 최고치의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네번째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지수가 높은 원인중의 하나는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이다.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갈등지향적이며, 협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남관계를 살펴보면,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가장 높은 협력지수의 특징을 보인다. 그

리고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는 가장 높은 갈등과 평균이상의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북한관계의 경우, 남북대화 기간동안 평균치보다 낮은 갈등지수와 최고의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동안 가장 높은 갈등과 가장 높은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관련 이슈의 다차원성이다. 북한 관련 대외관계는 일반적 외교적 관계와 군사적 대립과 테러리즘과 같은 갈등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과 환경, 통일, 안보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관련 이슈들은 전통적 안보적 이슈와 경제이슈, 통일 이슈 등이 상호공존하는 가운데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중층적 성격이다. 북한 관련 대외관계는 여러 쌍의 양자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자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진전이 진행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의 관계진전이 추진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도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 기존의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협력이 진행되는가 하면, 협력에 의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요인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협력이 진전되면서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복합적 관계가 전개될 것이다.

- 목 차 -

제 I 장 문제제기	1
제 II 장 방법론과 자료	4
1. KEDS와 PANDA	4
2. 자료: 로이터통신사의 뉴스보도	8
3. 입력 유형	11
4. 변 수	16
5. 입력 샘플	22
6. 골드스타인 갈등·협력 지수	25
제 III 장 북한 관련 Event Data의 빈도 및 이슈 분포	28
1. 월별 평균과 유동적 평균(moving average)	28
2. 기간별 빈도 분포	31
3. 소스별 분포	35
4. 대상별 분포	38
5. 이슈 분포	39
제 IV 장 기간별 갈등·협력관계	47
1.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1984.1~1988.9	48
2.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1988.10~1993.2	49
3. 북한핵개발과 협상: 1993.3~1994.10	50
4.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 1994.11~1997.12	51
제 V 장 양자간 갈등·협력관계	55
1. 미·북관계	55
2. 일·북관계	60

3. 중·북관계	65
4. 러(소련)·북관계	69
5. 남북한관계	73
제 VI장 맺음말	79
참고문헌	86
<부록 1>	91
<부록 2>	93
<부록 3>	97
최근발간자료안내	106

- 도표목차 -

<표 1> 사례 ID Parameters: 로이터 보도의 유형	14
<표 2> PANDA 프로그램의 변수 요약 목록	21
<표 3> 북한 관련 event data의 기간별 빈도 분포	32
<표 4> 북한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별 분포	38
<표 5> 북한 관련 보도의 총 이슈 분포(1984.1~1995.4)	43
<표 6> 북한 관련 보도의 이슈 분포: 북한이 소스인 경우 (1984.1~1995.4)	44
<표 7> 북한 관련 보도의 이슈 분포: 북한이 대상인 경우 (1984.1~1995.4)	45
<표 8> 기간별 갈등지수	53
<표 9> 기간별 협력지수	54
<표 10> 북한과 미국간 이슈 분포: 1984.1~1995.4	57
<표 11> 북한의 대미관계	59
<표 12> 미국의 대북한관계	60
<표 13> 북한과 일본간 이슈 분포: 1984.1~1995.4	62
<표 14> 북한의 대일본관계	64
<표 15> 일본의 대북한관계	64
<표 16> 북한과 중국간 이슈 분포: 1984.1~1995.4	67
<표 17> 북한의 대중국관계	68
<표 18> 중국의 대북한관계	69
<표 19> 북한과 러시아(소련)간 이슈분포: 1984.1~1995.4	71
<표 20> 북한의 대러시아(소련)관계	72
<표 21> 러시아(소련)의 대북한관계	73

<표 22> 남북한간 이슈 분포: 1984.1~1995.4	76
<표 23> 북한의 대남한관계	78
<표 24> 남한의 대북한관계	78
<그림 1> 북한관련 event data의 빈도분포	30
<그림 2> 기간별 갈등지수	46
<그림 3> 기간별 협력지수	46

제 I 장 문제제기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내적인 구조적 문제와 사회주의권의 국제적 연계망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는 북한의 위기의 성격과 진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특히 북한의 위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적 차원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의 진로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대외적 관계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외관계의 성격은 북한의 위기의 성격과 변화방향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북한은 탈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에 적응하고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동북아의 주변 4국 및 남한간에는 각 이슈별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복잡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본 연구는 북한에 관련된 event data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event data의 자동입력프로그램인 PANDA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북한 관련 대외갈등·협력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¹⁾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1) event data 분석기법에 의한 다음 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2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대부분 기술적 연구이거나 정책제안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대외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적 연구 및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vent data 기법에 의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입력하는 작업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수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력자의 선입관과 가치관에 따라 입력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오류가 비밀관된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event data 분석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사건의 자동입력프로그램인 PANDA프로그램이다. PANDA프로그램은 완전자동화된 입력프로그램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입력기법을 유지함으로써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둘째,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갈등양상과 협력양상의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관련 대외관계를 갈등양상과 협력양상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갈등과 협력간 정비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반비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가설은 갈등과 협력이 제로섬(zero-sum)관계에 있다는 가정이다. 즉 갈등이 증가하면 협력이 감소하며, 갈등이 감소하면 협력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다른 가설은 양자간 정비례관계가 있다는 가설이다. 즉 갈등이 증가하면, 협력이 증가하며, 갈등이 감소하면 협력도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이것은 갈등과 협력이 동반적 현상으로 양자간

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드문 예다. 배진수, 「탈냉전 이후 한반도 긴장기류 분석: Event Data분석, 1989-1995」(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소, 1995) 참조.

에는 순기능적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관련 대외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양상과 협력양상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1984년부터 1997년까지를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 별로 갈등·협력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event data를 각각 개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각 기간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분기점은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북한 체제의 내부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기간이 ① 1984. 1 ~ 1988. 9: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② 1988. 10 ~ 1993. 2: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③ 1993. 3 ~ 1994. 10: 북한핵개발과 협상, ④ 1994. 11 ~ 1997. 12: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의 양자간 갈등·협력의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미국, 북한·일본,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남북한간 양자관계가 각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으며, 다른 양자관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양자관계를 양자간 상호관계와 양자간 일방적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자간 상호관계는 양측간 상호작용의 전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방적 관계는 다른 한편에 대한 한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자간 상호관계는 두쌍의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합한 것이다.

제II장 방법론과 자료

이 연구는 PANDA(Protocol for the Assessment of Nonviolent Direct Action)를 사용하여 1984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북한관련 event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PANDA는 완전 자동화된 사건 입력체계(event coding system)인 KEDS/PANDA²⁾에 근거하여 갈등의 상호작용의 유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분석틀이다.

1. KEDS와 PANDA

PANDA는 캔사스대학(university of Kansas at Lawrence)의 쉬로트교수(Philip A. Schrodt)에 의해 고안된 KEDS(Kansas Events Data System)를 변용한 완전자동화된 기계 입력시스템을 사용한다.³⁾

-
- 2) PANDA는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의 비폭력제재 프로그램(Program on Nonviolent Sanctions, White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과 캔사스대학 정치학과에서 개발한 캔사스 event data system 프로젝트(Kansas Event Data System(KEDS) Project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Kansas at Lawrence)의 공동작업의 결과이다. 쉬로트(Philip Schrodt) 교수는 KEDS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안자이다.
 - 3) KEDS 문장분석 프로그램(parsing program)은 현재 맥킨토시 플랫폼(Macintosh platform)에서 작동한다. KEDS프로그램은 파스칼로 쓰여져 있으며 약 12,000 코드라인(lines of codes)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P. A. Schrodt and S. G. Davis, "Techniques and Troubles in the Machine Coding of International Event Data,"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1994); KEDS는 기본 프로그램을 짧고 빠르게 하는 hard-code 외에 다양한 사전(표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활용한다. KEDS는 이와 같이 즉시 편집되는 사전을 통해 작업을 통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KEDS프로그램내에서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단순히 사전을 재편집함으로써 기본 프로그램을 쉽게 변용할 수 있다.

KEDS의 문장분석체계(parsing system)와 PANDA의 자료입력규약집(protocol)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규명을 위해 함께 작동하며 폭력적인 갈등의 상호작용과 비폭력적인 갈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KEDS는 event data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축성있고, 자동화된, 그리고 신뢰성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KEDS는 자체의 규약집에 의해 작동할 수도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다른 규약집을 위한 엔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KEDS와 함께 작동하는 PANDA는 입력과 분석을 위해 사건(event)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KEDS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게르너(D. J. Gerner), 쉬로트(P. A. Schrodt), 프란시스코(R. A. Francisco), 웨들(J. L. Weddle)은 여러 개의 정의를 검토한 뒤 사건(ev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⁴⁾

“사건은 상호작용이며, 특정한 시점과 연관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문장으로 기술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로서 일련의 행위자들을 지니고 있고, 동사로서 타동사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행동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KEDS프로그램은 몇 단계에 걸쳐 본문을 처리한다.⁵⁾ KEDS프로그램은 우선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꿈으로써 여과된⁶⁾ 입력 본문을

4) D. J. Gerner, P. A. Schrodt, R. A. Francisco and J. L. Weddle, “The Analysis of Political Events using Machine Coded D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No. 1 (1994), p. 95.

5) 자세한 기술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P. A. Schrodt and S. G. Davis, “Techniques and Troubles in the Machine Coding of International Event Data,” pp. 4~5.

6) 여과프로그램(filter program)은 몇 단계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로이터의 보도 본문 대부분을 포함하여 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거한다. 이것은 또한 각 기사 리드(lead)에 대해서 각각의 독자코드(ID)를 부여한다.

표준형태로 전환하고, 쉼표(,)를 빈 공간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KEDS프로그램은 본문에 있는 각 단어를 사전(protocol, 규약집)의 표제어(단어와 단어의 어간, 그리고 구를 포함)와 일치시킨다. PANDA프로그램은 8개의 사전 또는 목록(동사, 장소, 행위자, 이슈, 영역, 맥락,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일치된 단어들은 문법적 품사(명사, 동사, 대명사, 기타)를 부여받고, 나머지 부문은 활자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KEDS프로그램은 활자화된 본문에 대해서 보통명사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부여하고, 대명사에는 관계사를 부여하며, 복합명사구들을 구분하고, 쉼표에 의해서 수식된 종속구들을 제거한다.

PANDA프로그램은 중복된 사례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 보도의 기본 지표중의 일부가 다음 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것은 다른 사건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재보도는 종종 추가정보를 제공하며 이전의 보도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모든 입력변수에 대한 입력내용이 동일한 사건보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중복된 보도 내용이 제외된다.

KEDS/PANDA에 의한 기계 입력은 정확히 말하면 ‘자동화된 인간입력방식’(automated human coding)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KEDS/PANDA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연구자가 선행적인 결정을 하고 이후 계속 입력과정을 점검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여전히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모든 결정에 대한

마지막으로 통계적 과정을 통해서 중복 기사가 제거된다. 이러한 여과과정은 표준 입력 포맷(standard input format)을 위해 고안된 기계적인 절차이다. 이 절차는 또한 대부분 워드 프로세서의 매크로(macro)기능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다.

7) 이러한 선행적 결정을 하는 사람은 특정한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관심이나 전문지식을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용된 입력자라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이다.

사전 세부화는 수없이 반복되는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절차를 구체화한다. 물론 이러한 반복적 작업은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구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동화과정은 이론적 전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이론적 전제는 프로그램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론적 전제와 입력과정의 투명화는 입력결정의 바탕에 놓여있는 많은 전제들을 들춰내기 때문에 다른 이론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촉진한다.

KEDS/PANDA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입력 및 세탁과정에 수반되는 인간의 노력과 금전적 비용이 더 이상 연구과제 수행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다. KEDS의 신축성과 자동화에 힘입어 사건이 발생한 뒤 몇 개월이나 몇 년뒤에나 입수가 가능한 자료 획득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보도 원문을 보존하고 그것을 자료분석 결과에 통합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자료분석체계와 비교할 수도 있다. 이처럼 KEDS는 다른 자료소스들을 입력함으로써 복수의 경쟁적인 event data를 만들 수 있다.

자동입력은 100% 반복될 수 있으며, 조작가능하고(입력규칙은 즉각 변경될 수 있음), 신뢰할 수 있으며(컴퓨터화된 체계는 투명하고 명백하게 프로그램화 될 수 있음), 정확한 결과(기계작업의 결과는 인간의 수작업 결과와 수렴함)를 산출할 수 있다.⁸⁾

요약하면, KEDS/PANDA 접근법은 민감한 갈등의 전개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확실하며, 비용절약적이고, 믿을만한 수단을 제공하며, 보다 개선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8) 기계입력이 인간의 수작업보다 우세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D. J. Germer, P.A. Schrod, R. A. Francisco and J. L. Weddle, "The Analysis of Political Events using Machine Coded Data," pp. 101~102.

명백한 물리적 폭력으로 표명되기 이전의 비폭력적 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폭력으로 확대되는 갈등을 규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자료: 로이터통신사의 뉴스보도

렉시스/넥시스 자료 서비스(Lexis/Nexis Data Service)는 매년 약 50,000건의 로이터통신 보도를 게재한다. 하바드연구팀은 렉시스/넥시스 자료 서비스의 'WORLD library'와 'REUNA files'(전에는 REUTER files로 불리웠음)로부터 로이터통신 보도의 HLEAD⁹⁾부분을 다운로드받는다. 현재(주로 연구개발 이유를 위해서) PANDA 프로젝트가 HLEAD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의 KEDS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이용되었다.¹⁰⁾ 로이터통신의 HLEAD 부분은 보도의 처음 몇 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vent data입력에 관련된 기본 정보인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요약한다. 예를 들면, 다음 인용문은 HLEAD의 실제 입력본문이다: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woo left Seoul Sunday for an historic meeting in the United States with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intended to bring a measure of glasnost to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9) HLEAD는 각 보도의 내용에 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의미한다.

10) KEDS는 한줄, 한줄 단위로 보도를 입력할 수 있다. KEDS는 보도의 완전한 본문을 입력함으로써 별개의 사건들의 연속성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 장애요인은 보도의 뒤 부분에서 불분명한 대명사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입력소스로서 선정된 것은 KEDS 개발팀의 경험에 토대를 둔 것이며, 또한 갈등사건에 대한 세계적인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로이터의 편견을 주어진 사실로서 수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로이터통신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도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된다. 하나의 뉴스보도원에 의존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화된 입력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첫번째 조치일 뿐이다. KEDS/PANDA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보도되는 뉴스보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연구질문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PANDA 프로그램은 특히 잘 포착되지 않는 비폭력적 투쟁의 상호작용 행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뉴스보도의 간략한 부문인 HLEAD를 사용하면 비폭력적 투쟁에 관한 보도를 입수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넥시스(NEXIS)로부터 입수가능한 다양한 뉴스보도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HLEAD는 거의 항상 보도되는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지표들을 전달하며, 두번째 및 세번째 줄은 상황 설명 맥락이나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HLEAD 부문을 수식하며, 보도의 몸체 부문은 보통 방대한 인용문과 배경 정보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KEDS 시스템은 event data 개발을 위해 고안된 '성긴 문장분석체계'(sparse parser)이며, 보도의 표제부문만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로이터 뉴스보도는 '역피라미드'(inverse pyramid) 형태로 쓰여져 있다. 이것은 보도의 어떤 부문에서도 단절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구독자의 여러 가지 필요와 제약성에 따른 것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로이터 보도는 비록 축약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첫번째 한줄로도 보도 내용

에 관한 주요 개념을 알 수 있다.

확실히 KEDS는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에 관한 ‘보도’를 다룬다. 이점은 event data 연구의 기본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미디어 보도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편견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나 KEDS/PANDA 프로그램의 자동화와 신속성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뉴스보도원과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KEDS의 능력은 단일 뉴스보도원의 한계와 방대한 양의 자료처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사건보도의 입력자가 보도된 사건에 대해 보도된 사실대로 정신을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KEDS는 보도된 사건에 관한 입력자의 선협적인 지식에서 연유하는 독특한 편견이나 해석을 포함하여 인간에 의한 입력이나 인간의 보조를 받는 기계입력과 연관된 실수를 최소화한다. KEDS는 사건보도에 분명하게 나타난 정보만을 입력한다. KEDS는 보도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KEDS는 사건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미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대로만 방대한 양의 보도를 입력한다.

대부분의 HLEAD는 단순과거의 시제로 기술되며, 관찰가능한 언어적 행태(verbal behavior, 예를 들면, 비난, 위협, 부정 등)와 비언어적 행태(non-verbal behavior, 예를 들면, 군사적 충돌, 파업, 방문 등)를 보도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관찰가능한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태이다. 그러나 분석의 단위가 되는 것은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관찰가능한 행태에 관한 사건보도(event reports)이다.

3. 입력 유형

자료입력 이전의 과정에서 각 보도에 대해 세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는 포맷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를 제외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분석을 위해 event reports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모든 보도는 로이터통신의 국제관련 보도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처리대상이 되는 방대한 양의 보도중에서 소수는 전송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 전달되거나 불완전한, 그리고 중복된 HLEAD는 배제된다. 그리고 연설이나 협정문과 같이 어떤 문서의 본문을 단순히 보도하는 내용들도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도 제외된다. 이러한 보도들을 제외하는 근거는 이것들이 입력 포맷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주제나 내용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어떤 주제는 입력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스포츠(올림픽은 예외), 예술행사, 시장조건, 자연재해, 사고 등의 주제에 관한 보도들은 제외된다. 스포츠 행사와 같은 주제들이 제외될 경우 갈등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들이 제외되는 것은 스포츠나 예술공연 등이 민감한 갈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KEDS 자동화프로그램은 규약집(protocol)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시장조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 보도가 규칙적이며 독자적인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예를 들면, Dow Jones Industrial Index는 여러 시장과 다른 조건들을 반영한 것임) 독자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특정한 행태에 관한 보도와는 다르다. 시장에 관한 보도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보도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시장조건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event data와 즉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조건에 관한 일상적인 보도는 로이터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로이터의 사건보도는 비록 몇 개의 다른 구조로 제시되지만 언어나 문체가 놀랄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보도는 사건의 존재를 단순히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보도하지만, 다른 보도는 어떤 수식을 붙이거나 또는 붙이지 않고 사건의 보도출처를 제3자에게 전가한다. 또한 어떤 보도들은 해설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해설에서 해설 자체의 언어적 사건(verbal event of narration)은 사건을 구성한다. 로이터의 이러한 보도구조의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공표적 사건 보도(declarative event reports)는 꾸밈이나 수식없이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며,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무엇을 했다”(some party did something to/with another party)라는 형태를 띤다. 예를 들면, “President Clinton flew to London today to meet with Prime Minister Major,”라는 보도는 보도출처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며, 기본적인 사실을 공표한다.

그러나 귀속적 사건 보도(attributed event reports)는 사건보도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3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밝힌다. “A White House Spokesman said President Clinton would fly to London today to meet with Prime Minister Major,”라는 보도는 이러한 귀속적인 보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건 보도는 비난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적 사건 보도(contested event reports)에서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President Clinton

accused the NRA of encouraging violent protest,”라는 보도에서 NRA가 ‘폭력적 저항을 조장했다’라는 내용의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비난적 사건보도의 핵심적 특징은 보도자가 ‘추정된’(alleged)이나 ‘비난된’(accused)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난적 사건보도의 경우, 비난대상이 되는 내용은 사건으로 입력되지 않고 ‘비난했다’라는 것만이 사건으로 입력된다. 다른 한편, 보도자가 ‘비난’(accus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폭력조장’을 사실로 보도할 경우, ‘폭력조장’이 보도사실로 입력된다.

KEDS프로그램이 보도를 처리할 때, 그 사전이나 규약집(protocol)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만을 입력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규약집이 특정한 연구질문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입력하기에 적합하더라도 하나의 규약집이 모든 사건이나 동사구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KEDS프로그램은 많은 인식되지 않은 동사구나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보도들이 해설될 때는 해설 그 자체가 보도되는 사건이 된다. 해설(narrations)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띤다. “President Clinton said 「any party」 did 「an unrecognized event」 with 「any other party」...”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인식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기사의 보도출처가 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해설의 주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해설보도에서 보도대상(target)이 종종 암시적이지만, 해설보도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한다’라는 사건의 지표들을 지니고 있는 한 이것은 사건으로 입력된다. <표 1>의 예문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오페라에 참석했다’는 것은 국제적 갈등·협력 event data의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으로 입력되지 않고, 단지 ‘대변인이 말했다’라는 것만이 사건으로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KEDS프로그램은 공표(declaration)라는 형태의 보도에 접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규약집의 정의에 의하면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비사건(non-event)은 “any source did an unrecognized event to any target”이라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비사건은 그 자체로서 표식판이 붙여지고 더 이상 입력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처리된다. <표 1>의 예문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오페라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국제적 갈등·협력 event data의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표 1> 사례 ID Parameters: 로이터 보도의 유형

Event	Report Type	Example
recognized	declarative event report	Clinton met with Major today
recognized	attributed event report	spokesman said Clinton met with Major
any	contested event report	Bush accused Noriega of beating nuns
unrecognized	narration*	spokesman said Bush attended the opera
unrecognized	declaration**	Bush attended the opera

* 해설(narration) 그 자체는 사건보도가 될 수 있다.

** 공표(declaration)는 사건보도로 처리되지 않는다.

모든 공표적 사건보도와 귀속적 사건보도는 입력을 위해서 규약집에 있는 사건 표제어(entry of event)와 대응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난적 사건보도와 해설은 규약집에서 비난과 해설이 인식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사건으로 입력되지 않는 보도들은 잔여부문으로 남게 된다. 모든 사건보도의 20%이상이 KEDS/PANDA의 사건범주(event

categories)의 053(comment on situation-neutral에 해당함)에 해당하며, 이것은 WEIS(World Events Interaction Survey)의 입력코드에 의하면 ‘중립적 논평’(neutral comments)에 해당한다.

자료여과과정을 거친 하나의 HLEAD는 전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다음 두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HLEAD를 하나의 사례로 취급하는 지침이 적용된다. 첫번째 예외는 공표적 사건 보도와 비난적 사건보도에서 복수의 동사는 복수의 사례로 입력되는 것이다. 따라서 “the students paraded throughout the city before holding a teach-in on campus,”라는 보도의 경우, ‘parading and holding a teach-in’은 두 개의 사례가 된다. 마찬가지로 논리에 따라, 복문에서 문장의 주부와 종속절이 다같이 사건으로 인식될 경우, 복문은 복수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난적 사건 보도의 경우, 비난(예문에서 an accusation)이 우선권을 지니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단일 사건으로 입력된다. “Bush accused Noriega of human rights abuses, according to a White House spokesperson,”이라는 보도의 경우, 비난(accusation)만이 사건으로 입력되며, according to a White House spokesperson은 입력되지 않는다. 그리고 “Bush accused Noriega of stealing money from the Bank of Panama,” 라는 보도의 경우, 추정된 부문인 ‘the stealing of money’는 사건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두번째 예외는 복수의 다른 행위자(source)와 대상(target)에 대한 보도의 경우, 각각의 행위자 및 대상에 대한 보도가 각각 다른 사례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적 명사가 주어인 경우 집합적 명사는 단일 행위자로 입력된다. 예를 들면, ‘G7’정상회의에 참가한 7개국은 하나의 집합적 명사로 취급된다.

4. 변 수

가. 보도 날짜

첫번째 통제변수는 보도가 처음 나타난 날짜를 표시하는 8개의 문자코드이다. 날짜코드의 포맷은 MM/DD/YY이며, 0은 입력하지 않는다.

나. 보도의 ID

보도의 ID는 두번째 통제변수이다. ID는 세자리의 아라비아 숫자이며 여과 프로그램을 거친 중복되지 않은 HLEAD에 부여된다. 보도 날짜와 ID가 결합하여 입력된 보도 원문에 대해 각각의 ID코드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원래의 보도 원문을 추적할 수 있다.

다. 행위자(actors, source and target)

행위자는 보도된 사건의 보도 출처(source)와 보도 대상(target)이다. 이 변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보도에서 '누가'와 '누구에게'를 밝히는 것이다. 행위자 코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행위의 수행자(agent)에 의해서 보완된다. 행위자 코드의 12개 문자 가운데 처음 3개 문자는 항상 정치적 단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미국(United States)은 USA로 표시되고, 러시아(Russia)는 RUS로(1991년 8월 24일 이후)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로 인정되는 정치체제와 인구 백만명 이상의 영토(territory)가 행위자 사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단위의 총 숫자는 약 185개이다. 그리고

행위자 코드의 다음 3개 문자는 정치적 하위 단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뉴욕은 USASUB에 해당된다. 행위자 사전의 정치적 하위단위에는 위에서 언급한 나라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모든 수도와 주요 도시, 주가 포함되어 있다.

행위자사전에는 또한 정부기구(부처)가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기구(agency)는 특정한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며, 이것은 단일의 국가행위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백악관(the White House)은 USA:EXE로 입력되고 캐나다 기마경찰(Mounties)은 CAN:POL로 입력된다. 이 경우 'exe'(for executive branch)와 'pol'(police)은 행위자에 관련되는 수행자(agent)변수이다.

또한 KEDS프로그램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자들을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 사전의 독립국가 리스트는 「1994 CIA Factbook」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단일의 국가행위자 외에 PANDA는 연구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유형의 국가행위자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규명하고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티벳(Tibet)이나 체첸(Chechen)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국가행위자들의 경우, 입력을 위한 국가 규모 및 도시 규모의 최소한 인구 기준치가 완화될 수 있다. 즉 PANDA프로그램은 국가중심적인 정의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연구목적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변용될 수 있다.

PANDA는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든 아니든, 특정한 영토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몇 개의 국가행위자들을 단일 행위자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며 과도적인 국가행

위자들은 별개의 정치체제로 취급되었으며, 그들이 속하고 있는 나라를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보존된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지정하는 포맷은 ABCABC이다. 예를 들면, PANDA프로그램에서 티벳은 CHNTIB로 입력되고, 팔레스타인은 ISRPAL로 입력된다(1994년 5월 14일 이전). 단일국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과도적 국가행위자에 대해서도 하위정치단위를 첨가할 수 있다. 따라서 ABCABC SUB 포맷에 의해 티벳의 수도인 라사(Lhasa)는 CHNTINSUB로 입력된다. 12개의 문자 코드방식에서 네번째 수준의 구체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KEDS프로그램의 코드 숫자의 한계때문에 네번째 수준의 구체화 지표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단일 국가행위자에 덧붙여, PANDA는 국가적인 범위나 초국가적 범위에서 개인들과 명목적 집단에서부터 공식적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s)를 전부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들은 반드시 영토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들 중 많은 것은 국경을 초월한다. 모든 국가간 조직이나 초국가간(정부간)조직은 단일 국가영토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사회적 행위자로 취급된다. 예를 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비정부간 초국가적 행위자의 예에는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명목적집단인 이슬람(Muslims)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공식적 비정부간 조직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개인 행위자를 입력하는 포맷은 숫자 '7'을 맨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성과 이름이 뒤따른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보통 그들의 성이 뉴스에 보도되기 때문에 그들의 성만이 입력된다. 집단이나 조직의 포맷은 개인의 포맷과 같으며, 이 경우 각각 숫자 8과 9을 앞에 붙인다. 행위자들의 경우 접두사인 숫자까지 포함하여 최대

한 12개의 문자(현재 KEDS프로그램하에서)가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특정한 국가행위자에 대해서 미리 특정한 입력코드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회적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정한 입력코드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PANDA는 특정한 행위자의 입력코드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나 영토만을 입력하는 방식을 똑 같이 적용할 수 있다. PANDA프로그램은 실험적 목적을 위해서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교황(Pope)의 두 개인에 대해서 별도의 입력코드를 지정하였다.

집회·모임, 인종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종교적 집단을 포함하여 특정한 명목집단을 입력하기 위해서, PANDA는 거(T. R. Gurr)의 'minorities at risk'¹¹⁾를 포함하여 약 250개의 집단을 사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이슬람은 8MUSLIMS:REL로 입력되고, 제3세계(the Third World)는 8THIRDDW:NOM로, 그리고 제3세계국가(Third World countries)는 8THIRDDW:GRP으로 입력된다. 여기에 행위의 수행자를 추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정부관리들의 경우, 그들의 직책이 특별사전에 분명하게 입력되어 있다.

공식적 조직과 회사, 정당의 범주에는 국가수준과 초국가적 수준에서 공식적 연합, 동맹, 조직화된 저항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NATO는 9NATO:IGO로, Greenpeace는 9GREENPEACE: NGO로 입력된다.

라. 행위의 수행자(agents of source and target)

행위의 수행자 변수는 각각의 공동체내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역할

11) T. R. Gurr, *Minorities at Risk*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참조.

이나 전문적 역할, 또는 지위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SOURCE와 TARGET코드는 양자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행위의 수행자 코드는 특히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생, 교수, 업계 등이 행위의 수행자 코드이다. <부록 1>은 PANDA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수행자 코드의 목록이다. 어떤 행위 수행자들은 콜론(:)을 통해서 행위자 사전의 행위자 코드와 연결된다. 이러한 것들은 묵시적 코드(implicit codes)라고 불리우며 KEDS 규약집에 기술되어 있다.

마. 사건의 상호작용(event interaction)

KEDS 입력체계의 핵심은 5,400개 이상의 동사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 사전(verb phrase dictionary)이다.¹²⁾ 비폭력적 행동의 수단에 대한 샤프(Gene Sharp)의 목록¹³⁾을 사용하여 KEDS와 PANDA의 연구팀은 비폭력적 투쟁의 많은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event data framework(the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or WEIS)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확대시켰다. 그 결과 사건의 범주가 63개에서 159개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사건입력 코드는 원래의 WEIS 범주에 대응된다. 기존의 널리 사용되고 있는 WEIS프로그램에 기초함으로써 PANDA프로그램은 WEIS프로그램과 양립할 수

12) 쉬로트(P. A. Schrodtt)와 데이비스(S. G. Davis)는 자동화된 원문처리에 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영어로 보도되는 뉴스보도에 의해서 기술되는 정치적 사건을 완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약 5,000개의 동사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다. P. A. Schrodtt and S. G. Davis, “Techniques and Troubles in the Machine Coding of International Event Data,” 참조.

13) G.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Publishers, 1973), 참조.

도 있고, 지역적이거나 세계적 수준에서 다른 event data 프로그램에 의한 연구결과와 비교될 수도 있다. WEIS와 PANDA/KEDS의 사건 입력코드의 상호비교는 <부록 3>과 같다.

<표 2> PANDA 프로그램의 변수 요약 목록
(자료 입력 순서대로 제시됨)

Name	Description
Report Date	An 8 character (MM/DD/YY) code representing the date of the report (no leading zeros)
Report ID Number	A 3 digit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for every report, assigned to each day to all non-duplicate, formatted HLEADS by the filter program (no leading zeros)
Source	A 12 character (alphanumeric) nominal code for the nation, organizational, ethnic, or national grouping of the reported source--generally a proper noun.
Source Agent	A 3 letter nominal code for the reported source's agency or sector affiliation--the agent or sector of the source, e.g., police, students, labor, etc. (see Appendix1)
Target	A 12 character (alphanumeric) nominal code for the nation, organizational, ethnic group, or national grouping of the reported target--see source, above
Target Agent	A 3 letter nominal code for the reported target's agency or sector affiliation--follows source agent, above
Event	A 3 numeral KEDS/PANDA nominal code for the reported event or method of action, all of which are mapped back to the original WEIS categories
Issues in Contention	A 1 letter nominal code for the reported and/or apparent issue associated with the event report--a set of eighteen categories

KEDS프로그램은 목록에 있는 동사유형과 보도원문의 내용을 대응시킨다. PANDA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형적 동사유형은 다음과 같다: despite growing protest「---」, sympathize with protest「132」, and anti-government protest「871」. PANDA 프로그램이 일치되는

짜을 찾을 경우, 동사구 다음의 「 」안에 event code가 각 사건마다 부여된다. 하나의 HLEAD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사건이 입력될 수 있다.¹⁴⁾

바. 이슈

이슈목록은 처음에 Global Events Data System(GEDS) Coders' Manual¹⁵⁾에 있는 틀로부터 개발된 이후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련화 되었다. 이에 따라 lead에 있는 이슈 관련 보도들을 이슈의 집합으로 유형화하였다. 현재 18개의 이슈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낙태(ABORTION)는 T(moral thought and practice, not specifically religious)에 대응되고, 에이즈(AIDS)는 E(education, health, and public services)에 대응된다.

5. 입력 샘플

이상과 같은 규약집에 의해서 입력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변수는 ① report date, ② report ID number, ③ source, ④ source agent, ⑤ target, ⑥ target agent, ⑦ event, ⑧ place, ⑨ issue in contention 이다. 공란은 자료가 없는 변수이다.

14) 종종 하나의 리드(lead)에 여러개의 사건이 포함되며, 이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사례가 된다. 따라서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사례가 행위자와 장소 등에서 동일한 변수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event code로 입력된다. 제로코드「---」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거나(이런 경우 프로그램은 하위 유형을 탐색한다) 기존의 event code와 맞지 않는 동사 유형에 할당된다.

15) John L. Davies, *The Global Event-Data System: Coders' Manual*, (Marylan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991), 참조.

(예문 1)

Algerian security forces killed 13 armed Muslim militants in the village of Haouch el Mekhfi, 18 miles east of Algiers, the official news agency APS said Friday.

4/1/94	1	ALG	MIL	8MUS LIM	GUR	862	ALG	S
--------	---	-----	-----	-------------	-----	-----	-----	---

(예문 2)

Maine fisherman have gone to court over new federal regulations that are designed to protect dwindling fish stocks, but which the fisherman charge will drive them out of business.

4/1/94	123	USAS UB	LAB		JUD	224	USAS UB	S
--------	-----	------------	-----	--	-----	-----	------------	---

(예문 3)

Japanes prosecutor said Friday they had indicted former construction minister Kishiro Nakamura on charges of taking a bribe from a leading building contractor.

4/1/94	67	JPN	JUD		EXE	53	JPN	D
--------	----	-----	-----	--	-----	----	-----	---

(예문 1)은 다음과 같이 입력되었다: Algerian「source =ALG, security forces「Source Agent=MIL, killed「Event Code=862; lethal body assaults, all murders, executions and assassinations, armed Muslim「Target=8MUSLIM, militants「Target Agent=GUR, in the

village of Haouch el Mekli, 18miles east of Algiers. 하무치 엘 메크리 (Haouch el Mekli)가 인구 50만명 이하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행위자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SOURCE=ALG」가 장소변수인 「PLACE=ALG」로 입력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issue는 「S; security, safety, and order」로 입력되었다.

신뢰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진행중에 있지만, 입력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들은 사전을 재정의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문 2)에서, 동사구 'have gone to court'가 동사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vent 변수가 잘못 입력되었다. 이것은 KEDS내에서나 또는 KEDS외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동사유형을 동사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

다른 실수들은 교정하기가 보다 어려우며 방대한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절약된다. 예를 들면 (예문 3)에서 Kishiro Nakamura를 행위자 목록에 추가시키고 이것을 Japan에 대응시킴으로써 Japan을 target으로 선정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국가수반과, 저항운동지도자,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행위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화된 세계적 event data를 개발하기 위해서 행위자사전에 개인을 포함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현재의 자동문장해석 기법을 사용하는 자동입력프로그램에서 어떤 실수들은 필연적이다. 완전히 자동화된 규약집의 어떤 유형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자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점에서 PANDA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규약집에서 코드화작업보다 중요한 것은 규약집에 있는 모든 사전이 100%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

구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연구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약집을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EDS 자동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연구자는 몇일만에 전체 자료를 다시 입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는 다른 경쟁적 이론에 입각한 연구결과나 다른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이것들은 PANDA에 의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6. 골드스타인 갈등·협력 지수

맥클러랜드(C. A. McClelland)의 WEIS 범주(category)와 같이 PANDA 범주도 갈등을 서수적으로 측정(ordinal measure) 하기보다는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학자들은 시계열 분석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WEIS 범주를 갈등·협력의 숫자화된 지수로 표시하고자 하였다.¹⁶⁾ 갈등·협력의 이러한 지수화과정 이 원래의 범주들의 다양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¹⁷⁾

16)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J. E. Vincent, *Project Theor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S. G. Walker, D. Bohlin, R. Boos, D. Cownie, H. Nakajima, and T. Wilson, "Evidence of Learning and Risk Orientation during International Crises: The Munich and Polish Cas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4 (1984); J. S.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1992); D. J. Gerner and P. A. Schrodt, "Foreign Policy Interactions in the Middle East: An Initial Examination of Three Cases of Conflict,"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Washington, D. C. 1994); J. Bond, *Restructuring the Operational Code: A Psychological Assessment of George Bush and Events Leading to the Gulf War* (West Lafayette, IN: Purdu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4).

17) J. S. Goldstein and J. R. Freeman, *Three-Way Street: Strategic Reciprocity in Worl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골드스타인(J. S. Goldstein)은 61개의 WEIS event 타입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서수적인 갈등·협력지수를 만들었다. 골드스타인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8명의 국제관계학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하였다.¹⁸⁾ 골드스타인 갈등·협력지수는 최고의 협력적 상호작용인 +8.3부터 최고의 갈등적 상호작용인 -10.0까지 걸쳐 있다. 골드스타인 갈등·협력지수는 갈등과 협력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골드스타인 갈등·협력 지수화과정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우선 KEDS/PANDA 코드를 WEIS에 일치화시키는 작업이 행해진다. 그 다음 WEIS 코드는 골드스타인이 부여한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WEIS 코드 「10」부터 「100」까지는 협력지수로서 (+)의 골드스타인 지수를 부여받는 반면, WEIS 코드 「110」부터 「223」까지는 갈등지수로서 (-)의 골드스타인 지수를 부여받게 된다. 예를 들면, 조언(consult)은 WEIS 범주 「30」이며, 골드스타인 지수는 협력지수인 「+1.0」이다. 그리고 경고(warn)는 WEIS 범주 「160」이며, 골드스타인 지수는 갈등지수인 「-3.0」이다(<부록 3> 참조). 따라서 각 event data마다 골드스타인의 갈등·협력지수가 부여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골드스타인 지수를 이용하여 갈등·협력의 시계열 추세를 분석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골드스타인 지수의 총합계를 구해 갈등·협력의 총합지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가 상호 상쇄작용을 함으로써 갈등·협력의 순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갈등지수가 -3.0이고 협력지

1990), p. 39.

18) J. S.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1992), pp. 369~385.

수가 3.4일 경우, 총합지수는 협력지수인 0.4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행위의 소스와 대상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갈등과 협력 양상을 중화시킴으로써 갈등이나 협력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순지수만을 표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위의 상호작용을 갈등과 협력의 총합지수로 나타낼 경우, 갈등과 협력의 다양한 조합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면, 「갈등지수 -3.0과 협력지수 3.4인 경우」와 「갈등지수 -2.0과 협력지수 2.4인 경우」에서 총합지수는 다같이 0.4로 나타나지만, 갈등과 협력의 실질적 양상은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두번째 방법은 갈등지수와 협력지수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과 협력 양상이 동시적 현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갈등지수 -3.0과 협력지수 3.4는 공존하는 독자적 지수로 취급된다. 이러한 방법은 갈등과 협력의 상관관계, 특히 갈등양상과 협력양상이 정비례관계인지 아니면 반비례관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런 방법을 택할 경우, 어떤 행위의 상호작용의 갈등과 협력정도를 다른 행위의 상호작용의 갈등·협력정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드스타인 갈등지수와 협력지수를 독자적으로 취급하고 시계열로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Ⅲ장 북한 관련 Event Data의 빈도 및 이슈 분포

다음의 분석결과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로이터에 보도된 국제뉴스를 KEDS/PANDA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입력처리한 것이다. 우선 약 50만개에 이르는 총 보도 가운데 남한과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Korea')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한 것이 총 11,190개였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사건의 소스이거나 사건의 대상인 보도들이다. 그 다음 11,190개의 보도 가운데 '북한'('North Korea')이 사건의 소스이거나 사건의 대상인 것을 선정한 결과 3,945개였다.

1. 월별 평균과 유동적 평균(moving average)

1984년부터 1997년의 14년동안 북한관련 국제뉴스의 보도인 3,945개의 빈도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가는 실선은 북한 관련 기사의 월별 보도 횟수이다. 예를 들면 1984년 1월에는 총 19건의 북한 관련 보도가 기록되었으며, 1984년 11월에는 총 25건의 보도가 기록되었다. event data의 보도횟수는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표시한다. 이것은 해당사안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특정한 갈등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그와 관련된 event data의 빈도가 일관되게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event data의 빈도수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특히 로이터통신의 관점에서 본 사건의 관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의 관심도와는 차이가 날 수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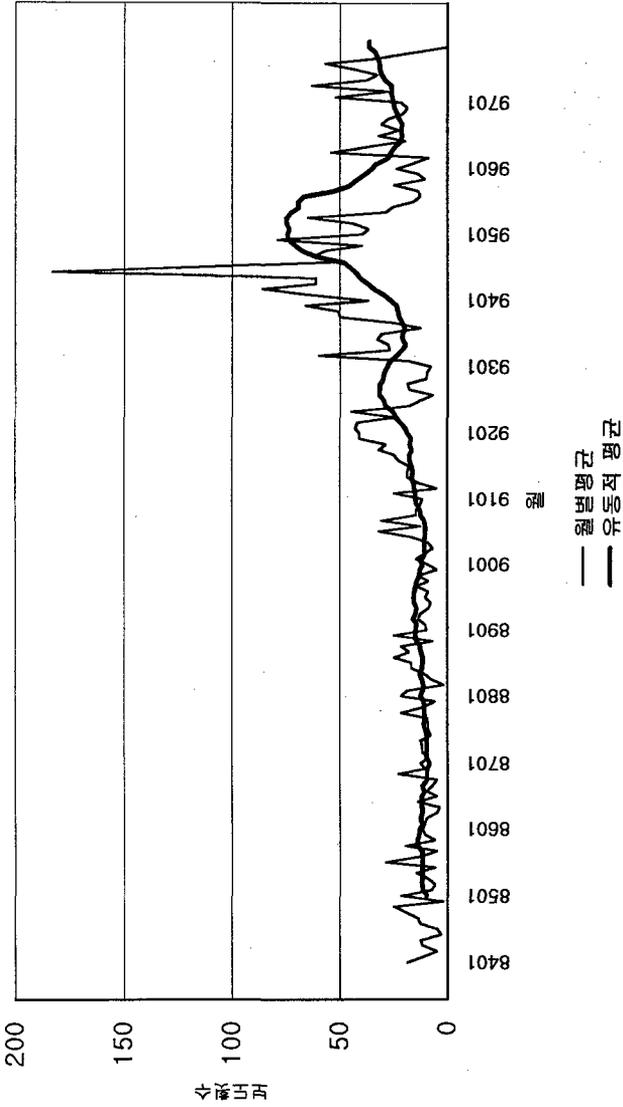
다. 그리고 매년 12월말부터 1월초까지는 언론사의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로이터통신의 전반적인 보도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감안되어야 한다.

한편, event data의 월별 빈도는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월별 빈도의 분포가 적절하지 않다. 이점을 감안해 고안된 것이 '유동적 평균'(moving average)이다. 유동적 평균은 매 시점에서 그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적 평균은 특정 시점에서 그 이전과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그 이전 12개월 동안 상승곡선이 지속되고 있었을 경우 상당기간동안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승곡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12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감소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굵은 실선은 이러한 유동성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북한핵위기가 한창 진행중이던 1994년 1월 북한 관련 사건의 보도수는 37개로 그 전달인 1993년 12월의 66개보다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유동성 평균을 살펴보면, 1993년 1월 이후 북한핵문제 관련 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 1월 이후에도 계속 북한 관련 사건 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동성평균의 중장기적인 하강국면을 통해 보도 횟수의 감소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4월 사건의 보도수는 65개로 전달의 44개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도 횟수가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관련 event data의 빈도분포: 월별 평균 및 유흥적 평균



2. 기간별 빈도 분포

그 다음 1984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기간을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북한관련 event data의 빈도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첫번째 기간은 1984년 1월부터 1988년 9월까지로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보도의 주요관심사는 서울올림픽 개최의 여파와 이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대응전략이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총보도는 684개이며, 월별 평균은 12.0개였다.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월별 빈도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유동성 평균은 대체로 평균치 12.0 내외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10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보도 빈도가 약간 상승했다. 그런데 올림픽에 관한 주제는 event data의 포함대상이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분야의 기사는 KEDS/PANDA 프로그램의 자료여과 과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북한 관련 기사의 일부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기간은 1988년 10월부터 1993년 2월까지로 이 기간동안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진행되는 한편 남북대화에 의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기간동안 총 보도수는 949개이며, 월별 평균보도는 18.3개로 첫번째 기간보다 월평균보도 수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event data의 평균보도수가 증가한 이유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남북대화때문이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각급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던 1991년 1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event data의 보도빈도가 40개 이상으로 높게 기록되었다.

<표 3> 북한 관련 event data의 기간별 빈도 분포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종전략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북한핵개발과 협상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	
월	event 수	월	event 수	월	event 수	월	event 수
8401	19	8810	22	9303	60	9411	40
8402	12	8811	7	9304	27	9412	79
8403	5	8812	25	9305	28	9501	40
8404	12	8901	10	9306	33	9502	37
8405	13	8902	11	9307	31	9503	44
8406	3	8903	14	9308	13	9504	65
8407	5	8904	13	9309	25	9505	29
8408	13	8905	9	9310	50	9506	26
8409	14	8906	8	9311	51	9507	16
8410	20	8907	11	9312	66	9508	13
8411	25	8908	9	9401	37	9509	14
8412	2	8909	15	9402	65	9510	25
8501	22	8910	9	9403	86	9511	11
8502	8	8911	14	9404	61	9512	14
8503	6	8912	5	9405	61	9601	24
8504	9	9001	9	9406	183	9602	16
8505	15	9002	15	9407	111	9603	9
8506	6	9003	11	9408	51	9604	54
8507	29	9004	7	9409	62	9605	38
8508	13	9005	9	9410	57	9606	20
8509	5	9006	17	합계	1,158	9607	32
8510	20	9007	32	평균	57.9	9608	23
8511	6	9008	13			9609	31
8512	11	9009	31			9610	28
8601	12	9010	15			9611	21
8602	11	9011	15			9612	19
8603	10	9012	13			9701	22
8604	5	9101	12			9702	52
8605	4	9102	25			9703	28
8606	14	9103	5			9704	63
8607	5	9104	14			9705	38
8608	10	9105	19			9706	33
8609	7	9106	19			9707	44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북한핵개발과 협상		북한의 위기와 참여화정책	
8610	5	9107	18			9708	57
8611	23	9108	23			9709	33
8612	11	9109	25			9710	16
8701	13	9110	32			9711	0
8702	9	9111	29			9712	0
8703	12	9112	41			합계	1,154
8704	12	9201	41			평균	30.4
8705	13	9202	43				
8706	8	9203	42				
8707	9	9204	25				
8708	9	9205	45				
8709	10	9206	18				
8710	22	9207	13				
8711	12	9208	7				
8712	6	9209	18				
8801	22	9210	19				
8802	19	9211	10				
8803	2	9212	10				
8804	8	9301	8				
8805	11	9302	19				
8806	17	합계	949				
8807	17	평균	18.3				
8808	25						
8809	18						
합계	684						
평균	12.0						

세번째 기간은 1993년 3월부터 1994년 10월까지로 이 기간동안 북한핵개발과 미·북협상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보도수는 1,158개이며 월별 평균 보도수는 57.9개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한 관련 event data의 보도수는 60개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그 때까지 북한 관련 event data보도수 가운데 최고치였다.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문」이 타결될 때까지 북한핵문제 관련 보도 때문에 북한 관련 event data는 높은 보도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고 유엔의 대북결의안 제재 논의, 카터 전 미대통령의 북한방문 등이 진행되었던 1994년 6월의 보도수는 183개로 전무후무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보도수는 111개로 전체 기간동안 2위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네번째 기간은 1994년 1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로 북한의 식량난 심화로 인한 북한의 위기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이다. 아울러 1996년 4월 한·미양국에 의해 제안된 「4자회담」 관련 사안도 이 기간의 주요 이슈이다. 이 기간의 총 보도수는 1,154개이며, 월평균 보도수는 30.4개이다. 이것은 북한핵위기 기간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지만 첫번째 및 두번째 기간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핵문제로부터 북한의 붕괴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의 유동성 평균을 살펴보면, 1995년 1월 이후 북한 관련 보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6년 4월 이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1995년 4월(65개), 1996년 4월(54개), 1997년 4월(63개)로 매년 4월이 연중 가장 높은 보도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매년 4월이면 보리고개로 인해 북한 식량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996년 4월(54개) 및 5월(38개)의 빈도가 높은 것은 「4자회담」 제안과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관련 보도의 월별 평균은 첫번째 기간의 평균 12.0에서 두번째 기간에 평균 18.3, 세번째 기간에 평균 57.9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후인 네번째 기간의 월별 평균보도는 첫번째 및 두번째 기간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세번째 기간보다는 낮은 수치인 30.4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는 핵문제 기간동안 가장 높았으며, 그 후 북한의 식량난 및 체제위기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스별 분포

<표 4>은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건의 소스가 북한인 것은 북한이 미, 일, 중, 러, 남한 및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행위자가 된 경우이다. 그리고 미, 일, 중, 러, 남한, 그리고 정부간조직이 소스인 것은 이들이 각각 북한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행위자가 된 경우이다.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를 북한, 미, 일, 중, 러, 남한, 정부간조직으로 제한한 결과 총 합계가 3,762개였다. 청 3,945개의 북한 관련 event data에서 3,762를 제외한 나머지 183개의 소스는 헝가리(3개), 국제적십자사(9개), G7(2개), 캄보디아(1개) 등이다.

북한관련 event data의 소스중 북한이 2,302(61.2%)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북한 관련 사건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북한이 대주변국 및 대남한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적극성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번째는 갈등주의적 해석으로 북한이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대외갈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내적 통합을 공고히 하

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북한체제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대남혁명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외적 긴장조성을 통해서 대내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두번째는 협력지향적 해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위기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외적 적극성은 대외협력지향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 해결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서 대미관계 개선 및 대일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대외경제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세번째 입장은 절충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이 갈등적 정책과 협력지향적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한이 한편으로는 대외협력을 지향하면서도 협상입지 확보 및 체제보장 수단으로 갈등적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관계망의 확대에 따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익의 상충과 대립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절충주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관련 event data 소스의 2위는 남한으로 710개(18.9%)이다.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남북관계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북한 관련 event에서 남한이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남한의 빈도는 18.9%로 북한의 61.2%에 비해 1/3에 약간 못 미친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 관련 event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보다는 소극적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이슈에서 남한은 문제제기보다는 문제대응적이며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관련 event data에서 3위는 미국으로 433개(11.5%)이다. 북한 관련 event의 소스로서 11.5%인 미국은 북한의 약 1/6, 그리고 남한의 약 1/2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적대국이었던 미국이 주변 4국 가운데 북한 관련 event의 소스로서 중국, 러시아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미·북협상이 시작된 이후,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간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 앞으로 미국의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 다음 일본은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로서 3위이며 126개(3.3%)의 사건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약 1/3에 해당한다.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 관련 사건의 소스이며, 대북경수로 제공을 위한 KEDO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소스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소스는 국제기구로서 총 96개의 보도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관련 사건의 주요 소스로 등장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주요 소스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소련)는 각각 50개 (1.3%), 45개(1.2%)를 기록하여 북한 관련 소스로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관련 사건의 소스로서의 비중이 현격하게 낮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탈냉전후 북한 관련 사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성이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스로서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북관계의 속성상 중국측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장표명보다는 은밀하고 간접적인 협의와 거래를 통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이 중국 및 러시아측 보도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도 소스로서 이들의 비율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4>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별 분포

	소스: 수(%)	대상: 수(%)
북한	2,302(61.2)	1,782(55.5%)
남한	710(18.9)	659(20.5)
미국	433(11.5)	400(12.4)
일본	126(3.3)	132(4.1)
정부간조직	96(2.6)	136(4.2)
중국	50(1.3)	64(2.0)
러시아(소련)	45(1.2)	40(1.2)
합계	3,762(100)	3,213(100)

4. 대상별 분포

북한 관련 event data를 대상별로 정리한 것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북한이 대상(target)인 것은 북한 이외 소스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사건의 행위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이외 국가나 집단, 조직이 대상인 것은 북한이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소스인 경우이다. 여

기에서 대상을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소련), 정부간 조직으로 제한한 결과, event data의 대상의 총수는 3,213개였다. 북한 관련 event data 총 3,945개 가운데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는 국제적십자사(7개), 이란(6개), 국제올림픽위원회(4개), 쿠바(3개), 몽고(2개) 등 732개이다. 북한 관련 event data 가운데 북한, 남한, 미, 일, 중, 러시아(소련), 정부간 조직으로 행위자를 제한했을 경우, 총 소스는 3,945개인 반면, 총 대상은 이보다 549개 적은 3,213개이다. 이것은 event data의 대상가운데 제외된 숫자가 소스가운데 제외된 숫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스로서 북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가운데 제외된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event data의 대상별 분포는 소스별 분포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event data의 대상으로 북한이 1,782개(55.5%)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남한으로 659개(20.5%), 미국 400개(12.4%), 일본 132개(4.1%), 정부간 조직 136개(4.2%), 중국 64개(2.0%), 러시아(소련) 40개(11.2%)의 순서이다. 각 대상별 비율을 소스별 비율과 비교하면, 북한의 대상별 비율이 55.5%로 소스 비율 61.2%보다 약간 낮은 반면, 남한, 미국, 일본, 정부간 조직, 중국, 러시아(소련)는 모두 대상별 비율이 소스별 비율보다 같거나 약간 높다. 이것은 북한의 소스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자들의 대상비율이 높아진 결과이다.

5. 이슈 분포

다음은 북한 관련 event data를 이슈별로 알아본 것이다. 이슈에 관한 자료는 198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만 입력되었으며, 그 이후는 입력되지 않았다. 따라서 네번째 기간이후 이슈분포를 통해서

북한위기의 심화와 대북포용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관련 보도의 총 이슈분포를 살펴보면(<표 5> 참조), 「외교」(‘Diplomacy’)가 1위로 650개(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군사력과 전력」(‘Armed Forces and Strategy’)가 510개(25.7%), 「평화와 테러리즘」(‘Peace and Terrorism’)이 213개(10.7%)이다. 이 세가지 이슈가 전체 보도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비중이 좀 떨어져서 「경제와 빈곤」(‘Economics and Poverty’)이 (96개, 4.8%), 「자결/분리」(‘Self-determination/ Secession’)가 (95개, 4.8%), 「안보와 질서」(‘Security and Order’)가 (90개, 4.5%) 등의 순이다.(이하 각 이슈는 영문으로 표기).

북한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Diplomacy’(650, 32.7%)는 외교적 관계나 상호방문, 토론, 관계재개, 동맹관계, 국교정상화 이슈, 정상회담 등을 망라하며 특정한 이슈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국제관계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관련 이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과의 외교적 상호관계와 대화 및 회담에 관한 것이다. 비록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지는 않았지만, 핵문제 해결과정 및 이후 다양한 통로를 통한 미·북대화, 일·북대화, 그리고 남북대화 등으로 인해 북한 관련 대외관계에서 ‘Diplomacy’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관련 이슈가운데 두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는 ‘Armed Forces and Strategy’(510, 25.7%)는 군사훈련, 병력배치, 방어와 억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군대의 충원과 훈련, 무기의 원조 및 이전, 군비통제와 군축, 불특정한 군사적 개입 등을 포함한다. 북한 관련 이슈 가운데 ‘Armed Forces and Strategy’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

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적 대립상황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납치, 대량학살, 사살, 생명에 대한 위협, 휴전, 무기통제, 침략, 불특정한 폭력 등을 의미하는 Peace and Terrorism(213, 10.7%)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불안정과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Armed Forces and Strategy'와 'Peace and Terrorism'을 합하면 723개(34.4%)로 이것은 'Diplomacy'의 650개(32.7%)를 상회한다. 따라서 북한 관련 대외관계에서는 비록 외교적 관계에 대한 협상 및 대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위협과 폭력, 테러리즘이 이것에 버금가거나 또는 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북한 관련 이슈로서 'Economics and Poverty'(96개, 4.8%), 'Self-determination/Secession'(95개, 4.8%), 'Security and Order'(90개, 4.5%)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Economics and Poverty'는 경제적 조건과 생활수준, 노동자 및 전문직 파업, 예산관련 문제 및 금융정책, 인플레이션, 보상문제, 범죄가 아닌 약탈문제, 조세, 사유화, 국유화, 굶주림, 실업, 카스트제도, 직업훈련, 빈곤, 경제정의, 비상지원, 기아, 복지 등에 대한 것이다. 'Self-determination/Secession'은 독립, 독립운동, 분리주의, 통일, 재통일, 불특정 독립운동 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Security and Order'는 간첩행위, 통행금지, 폭동진압을 위한 경찰의 행동, 국경폐쇄, 법과 질서, 시위진압, 사회적·정치적 질서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몇 년 전부터이며, 북한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실증적 보도가 힘들기 때문에 북한 경제 관련 보도의 비중이 4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슈 입력이 1995년 4월까

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북한 관련 경제 이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Self-determination/Secession’은 남북한통일 관련 이슈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이슈와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 관련 이슈는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것과 군사적 위협 및 테러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과의 일반적 외교관계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갈등적 상황이 여전히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 및 통일문제에 대한 비중은 외교관계 및 군사적 갈등상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북한 관련 이슈 분포를 북한 소스와 북한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한 소스 및 북한 대상에서 각각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Diplomacy,’ ‘Armed Forces and Strategy,’ ‘Peace and Terrorism’은 순위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서 총이슈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시하고 있는 이슈와 주변 4국 및 남한이 우선시하고 있는 이슈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Economics and Poverty,’ ‘Self-determination/Secession,’ ‘Security and Order’의 경우 북한 소스와 북한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지 북한이 소스인 경우 ‘Economics and Poverty’(56개, 4.9%)와 ‘Security and Order’(56개, 4.9%)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Self-determination/Secession’(38개, 3.3%)은 이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상인 경우 'Self-determination/Secession'(62개, 6.63%)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Economics and Poverty'(42개, 4.5%)와 'Security and Order'(35개, 3.79%)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변 4국 및 남한은 북한 관련 이슈에서 경제문제보다는 통일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북한 관련 보도의 총 이슈 분포(1984.1~1995.4)

이슈	수	%
Diplomacy	650	32.7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510	25.7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213	10.7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96	4.8
Self-determination/Secession	95	4.8
Security, Safety, and Order	90	4.5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76	3.8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48	2.4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45	2.3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41	2.1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31	1.6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23	1.2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9	1.0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19	1.0
Crimes and Corruption	11	0.6
Religion-based Issues and Disputes	8	0.4
Political Legitimacy	8	0.4
Moral Thought and Practice(Not specifically religion)	3	0.2
합 계	1,9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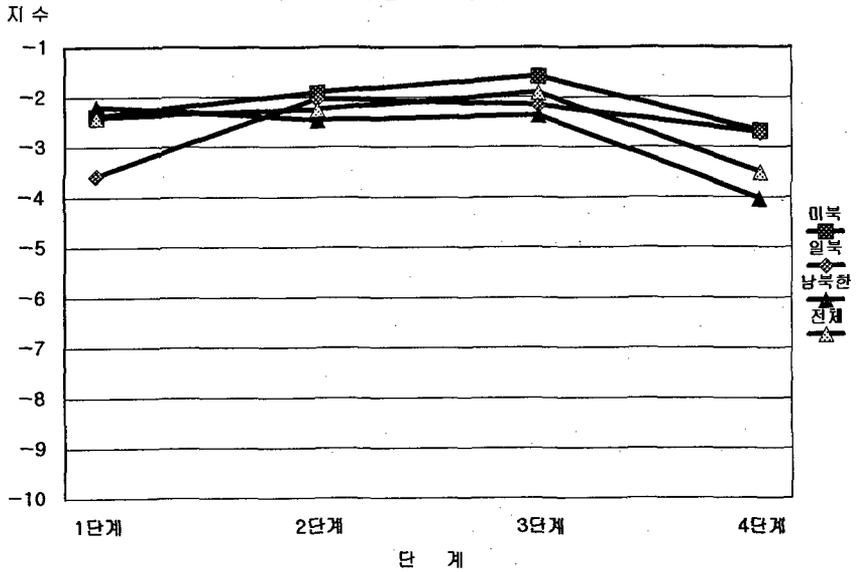
<표 6> 북한 관련 보도의 이슈 분포: 북한이 소스인 경우
(1984.1~1995.4)

이슈	수	%
Diplomacy	381	33.3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270	23.6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139	12.2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56	4.9
Security, Safety, and Order	56	4.9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47	4.1
Self-determination/Secession	38	3.3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33	2.9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29	2.5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24	2.1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17	1.5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3	1.1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11	1.0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11	1.0
Crimes and Corruption	7	0.6
Political Legitimacy	5	0.4
Religion-based Issues and Disputes	3	0.3
Moral Thought and Practice(Not specifically religion)	2	0.2
합계	1,1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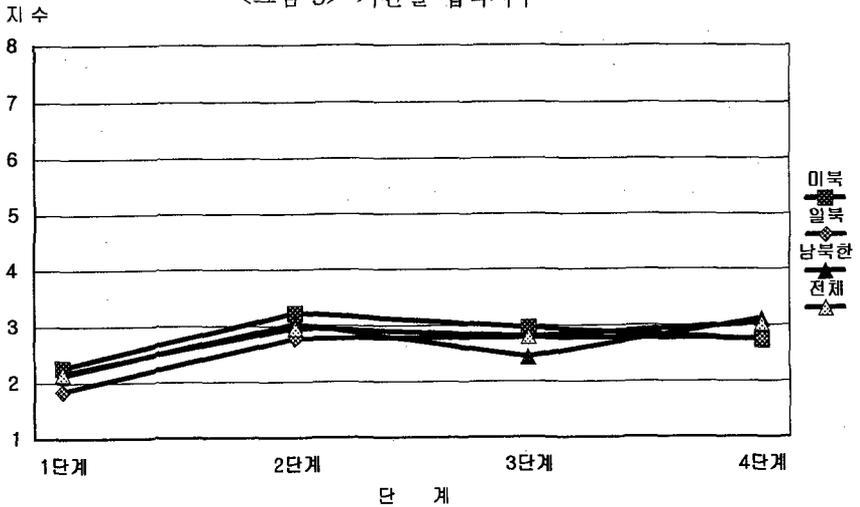
<표 7> 북한 관련 보도의 이슈 분포: 북한이 대상인 경우
(1984.1~1995.4)

이슈	수	%
Diplomacy	322	34.2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261	27.7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79	8.4
Self-determination/Secession	62	6.6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42	4.5
Security, Safety, and Order	35	3.7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31	3.3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20	2.1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20	2.1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17	1.8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17	1.8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9	1.0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7	0.7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6	0.6
Religion-based Issues and Disputes	5	0.5
Crimes and Corruption	4	0.4
Political Legitimacy	4	0.4
Moral Thought and Practice(Not specifically religion)	1	0.1
합계	942	100

<그림 2> 기간별 갈등지수



<그림 3> 기간별 협력지수



제IV장 기간별 갈등·협력관계

다음으로 북한 관련 event data를 갈등 data와 협력 data로 구분한 뒤, 골드스타인 갈등·협력지수를 활용하여 기간별로 갈등양상과 협력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 관련 event data 가운데 갈등 event는 1,231개로 협력 event 949개보다 282개가 더 많다. 이것은 북한 관련 event의 전체 분포에서 갈등양상이 협력양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2.54이며, 평균 협력지수는 2.80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면에서는 협력양상의 정도가 갈등양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별로 북한 관련 event data의 갈등·협력지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에서부터 세번째 기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네번째 기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협력지수는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한핵개발로 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여겨졌던 세번째 기간의 갈등지수가 -1.91로 평균 갈등지수보다 낮은 반면, 협력지수도 2.80으로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기가 고조된 기간일수록 예상과는 달리 위기에 내포된 위협요소 때문에 언어적 대응 및 비언어적 대응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협상을 위한 협력적 제안도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참여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에서 협력지수가 3.03으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지수도 -3.51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협력과

갈등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동시병행적 현상이라는 것을 지적해 준다. 이것은 첨예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오히려 언어적 대응 및 비언어적 대응면에서 갈등과 대립, 분쟁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각 기간별로 갈등·협력 양상의 추세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1984.1~1988.9

첫번째 기간은 1984년 1월부터 1988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였다. 서울올림픽은 남한에게는 권위주의정권의 정통성부족을 상쇄하고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에게 서울올림픽 개최는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상대적 열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981년 24회 올림픽의 개최장소로 서울이 결정된 뒤,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 전략과 남북한의 공동올림픽 개최를 모색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의 파급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세계청소년축전 개최를 추진하였다.

<표 8>을 보면, 첫번째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2.41로 전체 평균갈등지수 -2.54보다 낮고, 협력지수는 2.16로 전체 협력지수 2.80보다 낮다. 따라서 첫번째 기간동안 갈등이나 협력은 다 같이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동안 양자관계에서 갈등양상이 가장 높은 것은 중·북관계(-4.42)이지만 표본수가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 갈등양상은 일·북관계 -3.59, 미·북관계 -2.39, 남북관계 -2.20순이며, 소련·북관계의 갈등지수가 -1.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남북관계의 갈등양상이 일·북관계 및 미·북관계보다 낮은 이유는 1984년 남한의 수재에 대해 북한이 구호물자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 갈등이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양자간 협력양상은 사회주의동맹관계인 중·북관계 및 러·북관계가 각각 2.43으로 다른 양자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북관계 및 러·북관계의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북 및 러·북간 동맹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한다.

2.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1988.10~1993.2

두번째 기간은 1988년 10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1991년 말 소련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로 절정에 이르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환경에 근본적인 위협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하여 남북대화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부터 남북한간 공식회담이 개최되어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된 것도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한반도에 미친 결과중의 하나였다.

두번째 기간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이 기간동안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에 비해서 -2.25로 감소한 반면, 협력지수는 2.96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의 갈등지수는 전체 평균 갈등지수 -2.54보다 낮고, 협력지수는 전체 평균 협력지수 2.80보다 높다.

이 기간동안 양자관계의 갈등양상을 보면, 남북관계의 갈등지수가 -2.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러·북관계 -2.42, 일·북관계 -2.04, 미·

북관계 -1.91 순이며, 중·북관계의 갈등지수가 -0.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갈등이 높은 것은 대화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드러났으며, 양측이 이것을 협상전술차원에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양자관계의 협력양상은 러·북관계가 3.32로 가장 높지만 샘플수가 6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 다음 양자간 협력양상은 미·북관계 3.22, 남북관계 3.02, 일·북관계 2.76, 중·북관계 2.08 순으로 나타났다. 미·북관계의 협력양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부터 미·북간 접촉을 위한 양측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핵개발과 협상: 1993.3~1994.10

1989년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 촬영된 북한핵개발 관련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북한핵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후 북한핵문제는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은 1992년 2월 남한과 「비핵화공동선언」을 공동서명하고, 1992년 1월 말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임시사찰 결과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북한이 1993년 3월 NPT를 탈퇴함으로써 북한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최대 현안이자 국제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 북한간 협상 및 미·북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압력 및 당근전략이 병행사용되었다. 1994년 10월 미국

과 북한간 「제네바합의문」이 타결되어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기로 하는 타협안이 합의되었다. 아울러 핵협상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여러 분야에 걸쳐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번째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1.91로 전체 평균 갈등지수 -2.54보다 낮고, 협력지수는 2.80으로 전체 평균 협력지수 수준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핵개발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에 수반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지수는 전체 기간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협력도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표면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동안 양자간 갈등지수를 보면 핵협상의 주요 당사자였던 미·북관계의 갈등지수가 -1.59로 가장 낮고, 그 다음 중·북관계 -1.71, 러·북관계 -2.15, 일·북관계 -2.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한간 갈등지수는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양자간 협력양상을 살펴보면, 미·북관계의 협력지수가 2.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간동안 핵무기개발 문제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북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갈등관계와 높은 협력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양자간 협력양상은 일·북관계 2.79, 남북관계 2.43, 중·북관계 2.42, 러·북관계 1.45 순으로 기록되었다.

4.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 1994.11~1997.12

네번째 기간은 1994년 1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기간이다. 1994

년 10월 「제네바합의문」의 타결에 의해 북한핵문제는 북한의 핵동결과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기본구도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인해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이것이 북한체제의 생존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현황과 변화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었다. 특히 세계식량기구(WFP)가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식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호소함에 따라 북한식량난 및 식량지원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와 이 과정에서 수반될 한반도 및 동북아차원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북한체제의 잠정적 안정을 위한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미·북대화, 일·북국교정상화 논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울러 1996년 4월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4자회담」은 다자간 구도의 틀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번째 기간의 북한 관련 이슈의 중요 안건으로 등장하였다.

네번째 기간의 갈등지수는 -3.51로 전체 기간중 제일 높고, 협력지수도 3.03으로 전체 기간중에서 제일 높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갈등과 높은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핵문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해소된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요인이 억제되지 않고 표출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견해차이와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협력관계에 의해 새로운 갈등요인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네번째 기간의 돌발변수로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은 이 기간

동안 갈등요인을 증가시킨 원인중의 하나다.

이 기간동안 양자간 갈등지수를 보면, 남북관계가 -4.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북관계 -3.60, 일·북관계 -2.72, 미·북관계 -2.68, 러·북관계 -1.53 순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공식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은 이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 사건은 이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을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양자간 협력지수는 러·북관계가 4.90으로 가장 높지만 이것은 사례수가 5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 그 다음 협력양상은 중·북관계 3.86, 남북관계 3.10, 일·북관계 2.75, 미·북관계 2.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기간별 갈등지수

단계 양자 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		
	지수	수	표준 편차	지수	수	표준 편차									
미·북	-2.39	43	2.12	-1.91	83	2.50	-1.59	195	2.13	-2.68	93	2.22	-1.98	414	1.77
일·북	-3.59	25	3.43	-2.04	19	1.86	-2.17	25	3.18	-2.72	34	2.16	-2.67	103	2.66
중·북	-4.42		4.94	-0.87	3	1.15	-1.71	15	1.75	-3.60	6	1.75	-2.41	28	2.14
러·북	-1.20	2	1.41	-2.42	17	2.46	-2.15	10	2.28	-1.53	6	1.81	-2.12	35	2.24
남북한	-2.20	160	2.75	-2.47	146	2.43	-2.37	126	2.74	-4.04	219	2.86	-2.91	651	2.71
전 체	-2.41	234	2.79	-2.25	268	2.41	-1.91	371	2.44	-3.51	358	2.69	-2.54	1,231	2.57

<표 9> 기간별 협력지수

단 계 양자 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		
	지수	수	표준 편차												
미·북	2.27	25	2.14	3.22	27	2.10	2.96	131	2.37	2.73	112	2.29	2.84	295	2.30
일·북	1.84	10	0.85	2.76	28	2.19	2.79	15	2.15	2.75	39	2.39	2.66	92	2.12
중·북	2.43	11	1.61	2.08	15	1.71	2.42	5	0.91	3.86	30	2.63	3.04	61	2.08
러·북	2.43	8	1.81	3.32	6	2.62	1.45	2	0.64	4.90	5	3.54	3.18	21	2.34
남북한	2.13	112	1.95	3.02	183	2.27	2.43	45	1.88	3.10	135	2.33	2.78	475	2.17
전 체	2.16	170	1.87	2.96	260	2.22	2.80	198	2.21	3.03	321	2.39	2.80	949	2.21

제V장 양자간 갈등·협력관계

다음에서는 북한 관련 다섯 쌍의 양자관계인 미·북관계, 일·북관계, 중·북관계, 러(소련)·북관계, 남북관계의 갈등·협력관계의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자관계를 양자간 상호관계와 다른 한측에 대한 한측의 일방적 관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양자간 상호관계는 양측간 상호작용의 전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방적 관계는 다른 한편에 대한 한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양자간 상호관계는 두 쌍의 일방적 관계의 합계이다. 예를 들면, 미·북간 양자관계는 북한의 일방적 대미관계와 미국의 일방적 대북한관계의 합계이다.

1. 미·북관계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 관련 양자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이다. 미국과 북한은 냉전체제하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적대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교전당사자이기도 하였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각종 테러행위를 감행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불안하게 하며,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적대국가였다. 반면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제국주의의 종주국이며,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통일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도 양국간 기존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북한핵문제를 거치면서 양자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미국과 북한은 핵협상과정에서 전쟁직전의 위기상황에 이르기도 하

였지만, 결과적으로 쌍무적 성격의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 확대,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및 식량지원,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미군유해 송환, 북한미사일의 수출 및 개발금지를 위한 미사일협상,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가. 양자간 상호관계

미국과 북한 양자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갈등 event수가 414개로 협력 event수 295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갈등지수는 -1.98인 반면, 협력지수는 2.84이다. 따라서 양자간 갈등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간별로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북한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의 갈등event 수가 195개로 가장 많다. 그러나 세번째 기간의 갈등지수는 -1.59로 전체 기간에서 가장 낮다. 양자간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이후 점차 감소했다가 네번째 기간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자간 협력 event수는 세번째 기간에서 가장 많고, 이 기간의 협력지수는 2.96으로 평균 협력지수 2.84보다 높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네번째 기간의 협력지수는 2.73으로 세번째 기간의 협력지수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 흥미롭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북양자관계는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갈등 event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갈등지수는 가장 낮고, 협력지수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미국

과 북한은 갈등 관련 입장을 많이 표명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으며, 타협적인 제안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네번째 기간에서 갈등지수가 가장 높고 평균치 이하의 협력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표 10> 북한과 미국간 이슈 분포: 1984.1~1995.4

이슈	수	%
Diplomacy	158	35.2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153	34.2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65	14.5
Security, Safety, and Order	26	5.8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16	3.6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8	1.8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6	1.3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5	1.1
Self-determination/Secession	4	0.9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4	0.9
Crimes and Corruption	1	0.2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	0.2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1	0.2
합계	448	100.0

한편, 미국과 북한간 이슈분포를 살펴보면, 3위까지의 우선순위는 'Diplomacy'(35.2%), 'Armed Forces and Strategy'(34.2%), 'Peace and Terrorism'(14.5%)으로 전체 이슈 분포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단, 전체 분포와 비교해서 'Armed Forces and Strategy'와 'Peace and Terrorism'의 비중이 좀 더 높다. 따라서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서 미·북관계가 상대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평화 및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의 이슈는 'Security and Order' (5.8%),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3.6%), 'Economics and Poverty'(1.8%)의 순이다. 전체 이슈분포와 비교했을 때, 경제관련 이슈의 비중이 낮은 반면, 환경 및 천연자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이슈의 비중은 0.9%에 불과한 것도 특색이다.

나. 양자간 일방적 관계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미관계나 미국의 대북한관계의 전체 갈등 event수와 협력 event수는 비슷하다. 따라서 양자간 일방적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에 대한 민감한 정도는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갈등지수는 -2.30으로 미국의 대북한 갈등지수 -1.67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협력지수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미관계 협력지수는 2.69로 미국의 대북한 협력지수 2.99보다 낮다. 따라서 양자간 일방적 관계에서 북한의 대미관계가 미국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미관계를 살펴보면, 대미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에서 -2.83이었던 것이 점차 낮아져서 핵협상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1.78로 최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된 네

번째 기간에서 갈등지수는 -2.99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 1.89에서 두번째 기간 2.91, 세번째 기간 2.89로 높아졌으나, 네번째 기간에서는 2.62로 다시 낮아졌다. 북한의 일방적 대미관계는 핵협상기간이던 세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높은 협력지수를 나타냈으며, 대북포용정책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낮은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대미관계를 살펴보면, 대북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 -1.73에서 점차 낮아져서 핵협상기간인 세번째 기간에 -1.48로 최저치에 이르렀으나, 네번째 기간에서 다시 -2.3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 2.75에서 두번째 기간 3.96으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이후 낮아져서 네번째 기간에는 2.86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대북관계는 핵협상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의 협력지수를 나타내고, 대북포용정책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낮은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표 11> 북한의 대미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2.83	26	2.39	1.89	14	1.95
2단계	-2.08	57	2.58	2.91	19	1.97
3단계	-1.78	69	2.31	2.89	55	2.41
4단계	-2.99	51	2.03	2.62	59	2.13
전 체	-2.30	203	2.33	2.69	147	2.20

〈표 12〉 미국의 대북한관계

관계유형 단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1.73	17	1.43	2.75	11	2.36
2단계	-1.54	26	2.31	3.96	8	2.32
3단계	-1.48	126	2.02	3.01	76	2.35
4단계	-2.30	42	2.41	2.86	53	2.47
전 체	-1.67	211	2.09	2.99	148	2.39

2. 일·북관계

북한과 일본은 남북한 대화 및 미·북관계 진전 이전인 1991년부터 관계정상화 회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북 관계정상화문제는 배상 문제, 북송 일본인 처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었다. 이보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북한핵개발 문제였다. 따라서 1994년 10월 북한핵문제가 일단락되기까지 일·북간 관계정상화문제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양자관계가 담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북관계 진전과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와의 연계성 때문이다. 일·북관계와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북관계만 급진전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본의 배상금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대북관계 진전의 전략적·실리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가 실질적 차원에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가. 양자간 상호관계

일본과 북한 양자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갈등 event수가 103개이며 협력 event수는 92개로 갈등양상과 협력양상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갈등지수 -2.67, 협력지수 2.66으로 갈등과 협력이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갈등양상의 경우, 네번째 기간의 갈등 event수가 34개로 가장 많지만 전체 평균치와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지수는 일본과 북한간 국교정상화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인 첫번째 기간에서 -3.59로 가장 높았다가 국교정상화 논의가 시작된 두번째 기간에서 -2.04로 최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갈등지수는 점차 증가하여 네번째 기간에서 -2.72이다.

협력양상의 경우, 네번째 기간의 협력 event수가 39개로 가장 많다. 협력지수면에서는 첫번째 기간의 협력지수가 1.84로 가장 낮으며, 국교정상화논의가 시작된 두번째 기간에서 2.76을 기록한 뒤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북관계는 국교정상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갈등지수가 감소하고 협력지수가 증가했으며, 핵위기 기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갈등과 협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 갈등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양자간 실질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과 일본간 이슈 분포를 살펴보면, 1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는 'Armed Forces and Strategy'(29.8%), 'Diplomacy' (26%), 'Economics and Poverty'(11.5%)의 순위이다. 전체 이슈 분포와 비교하면, 군사력과 전략이 외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관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양자간 경제관련 이

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순위는 'Due Process and Civil Liberty'(8.7%), 'Security and Order'(5.8%), 'Peace and Terrorism'(5.8%)이다. 특히 통일관련 이슈가 전혀 없는 것은 북한과 일본이 통일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다.

<표 13> 북한과 일본간 이슈 분포: 1984.1~1995.4

이슈	수	%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31	29.8
Diplomacy	27	26.0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12	11.5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9	8.7
Security, Safety, and Order	6	5.8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6	5.8
Crimes and Corruption	4	3.8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2	2.0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2	2.0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1	1.0
Moral Thought and Practice	1	1.0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1	1.0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ions	1	1.0
Political Legitimacy	1	1.0
합 계	104	100

나. 양자간 일방적 관계

일본과 북한의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일관계에서는 갈등 event 65개, 협력 event 37개인 반면, 일본의 대북관계에서는 역으로 갈등 event 38개, 협력 event 55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일갈등지수는 -3.16으로 일본의 대북갈등지수 -1.84보다 훨씬 높다. 협력지수면에서도 북한의 대일 협력지수는 2.26으로 일본의 대북협력지수 2.93보다 낮다. 따라서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일관계가 일본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갈등지향적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일방적 대일관계의 경우, 대일 갈등지수는 국교정상화 논의 이전인 첫번째 기간동안 -4.77로 가장 높으며 두번째 기간에서 -2.0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세번째 기간에 -3.51, 네번째 기간에 -2.37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일협력지수는 세번째 기간동안 1.00으로 가장 낮으며, 네번째기간에서 2.37로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일관계의 경우, 국교정상화논의 기간인 두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평균치보다 높은 협력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과 가장 낮은 협력이 나타났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갈등지수 -2.37과 협력지수 2.37이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 대북관계의 경우, 대북갈등지수는 핵협상기간인 3단계에서 -0.94로 가장 낮으며,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3.69로 가장 높다. 일본의 대북협력지수는 국교정상화 논의 이전인 첫번째 기간에서 1.78로 가장 낮았던 것이 두번째 기간에서 최고치인 3.32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평균치인 2.93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의 대북관계는 국교정상화논의 기간동안 가장 높은 협력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에 갈등지수가 가장 낮고 평균치의 협력지수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북한핵 협상과정에서 국외자였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일본의 대북관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지수와 평균치를 상회하는 협력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참여화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본의 대북갈등이 점차 많이 표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북한의 대일본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4.77	17	3.45	1.90	5	0.00
2단계	-2.07	11	1.81	2.35	16	2.00
3단계	-3.51	12	4.07	1.00	1	
4단계	-2.37	25	2.23	2.37	15	2.12
전 체	-3.16	65	2.82	2.26	37	1

<표 15> 일본의 대북한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1.08	8	1.55	1.78	5	1.27
2단계	-1.99	8	2.05	3.32	12	2.40
3단계	-0.94	13	1.27	2.92	14	2.17
4단계	-3.69	9	1.69	2.99	24	2.56
전 체	-1.84	38	1.59	2.93	55	2.31

3. 중·북관계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이념적 동질성과 지정학적·전략적 요인, 한국전쟁 기간동안의 혈맹관계 등으로 인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의 하나이며, 북한의 급격한 붕괴나 남한 주도에 의한 한반도통일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하여 중국은 북한핵위기사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대하였으며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대규모 난민발생이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회주의국가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지원과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중·북간에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중국은 시장사회주의정책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은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정치·외교적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관계에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북관계의 미묘한 성격을 대변한다.

가. 양자간 상호관계

북한과 중국 양자간 상호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간 상호작용의 event수는 총 89개로 미·북관계 609개, 일·북관계 195개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사회주의국가의 속성상 대외관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나 정책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북관계는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서 특히 비공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자관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과 중국 양자간 상호관계에서는 갈등 event가 28개인 반면, 협력 event는 이것의 2배가 넘는 61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지수는 -2.41이며, 협력지수는 3.04로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갈등양상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간 갈등지수는 첫 번째 기간에서 -4.42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가 두 번째 기간에 -0.87, 세 번째 기간에 -1.71로 낮아졌으나 네 번째 기간에서 다시 -3.60으로 높아졌다. 양자간 협력지수는 네 번째 기간에서 3.86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과 중국은 핵위기 기간에도 낮은 정도의 갈등을 유지했다. 그리고 양자간 상호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 번째 기간에서 가장 높은 갈등지수 및 협력지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과 중국간 이슈 분포를 살펴보면, 'Armed Forces and Strategy'(32.5%), 'Diplomacy'(30.0%), 'Economics and Poverty'(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이슈분포와 비교할 때, 경제관련 이슈가 3위를 차지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순위는 별다른 편차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간 관계에서도 통일관련 이슈는 입력되지 않았다.

<표 16> 북한과 중국간 이슈 분포: 1984.1~1995.4

이슈	수	%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13	32.5
Diplomacy	12	30.0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5	12.5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2	5.0
Crimes and Corruption	1	2.5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1	2.5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1	2.5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1	2.5
Security, Safety, and Order	1	2.5
Self-determination/Secession	1	2.5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	2.5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1	2.5
합계	40	100

나. 양자간 일방적 관계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중국 갈등 event는 11개로 중국의 대북한 갈등 event 17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협력 event수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협력 event가 42개로 중국의 대북한 협력 event 19개보다 2배이상 많다. 그리고 갈등지수면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갈등지수가 -2.10로 중국의 대북 갈등지수 -2.60보다 낮다.

또한 협력지수면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협력지수가 2.24로 중국의 대북한 협력지수 2.04보다 높다. 따라서 중·북간 양자관계는 상호작용 event의 수나 갈등·협력 지수의 두가지 기준에서 모두 북한이 중국보다 협력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중국관계를 살펴보면, 대중국 갈등지수는 네번째 기간에서 -3.60으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협력지수에서는 2.84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중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에서 높은 갈등요인과 높은 협력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event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중국의 일방적 대북한관계를 보면,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 -4.42 이후 점차 감소하여 두번째 기간 -2.20, 세번째 기간 -2.04였다가 네번째 기간에서는 갈등 event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협력지수면에서는 첫번째 기간 3.58이후 세번째 기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네번째 기간에서 다시 증가하여 5.90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중국의 대북한관계에서는 특히 대북포용정책추진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갈등 event가 전혀 없고 협력요인이 최고에 이른 것이 주목된다.

<표 17> 북한의 대중국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1.77	7	0.62
2단계	-0.20	2	0.00	1.47	12	0.73
3단계	-0.37	3	0.46	2.40	3	0.87
4단계	-3.60	6	1.75	2.84	20	2.07
전 체	-2.10	11	1.08	2.24	42	1.36

〈표 18〉 중국의 대북한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4.42	4	4.94	3.58	4	2.25
2단계	-2.20	1		4.53	3	2.50
3단계	-2.04	12	1.80	2.45	2	1.34
4단계				5.90	10	2.50
전 체	-2.60	17	2.43	2.04	19	2.33

4. 러(소련)·북관계

북한과 러시아(소련)관계는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로 인해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소련은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이자 북한공산주의체제의 후원자 위치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국외자로 변했다.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제교역망의 붕괴에서 기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¹⁹⁾ 북한에게 있어서 대소련관계는 외교적·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소련과 남한과의 국교정상화 및 소련체제의 해체로 말미암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대남한위주정책으로 기울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소련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해협상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에서도 제외되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북한 및

19) 소련체제 와해 전후 북한과 소련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Nicholas Eberstadt, Marc Rubin, and Albina Tretyakova, "The Collapse of Soviet and Russian Trade with the DPRK, 1989~1993: Impact and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 양자간 상호관계

북한과 러시아(소련) 양자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56개로 중·북간 상호작용 event수 89개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작용 event수가 적은 것은 중·북한의 경우에서와 같이 양자간 관계가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실질적으로 양자간 관련 이슈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러시아(소련) 양자간 상호관계는 갈등 event가 35개로 협력 event 21개보다 많지만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적다. 지수면에서 보면, 갈등지수는 -2.12, 협력지수 3.18로 상대적으로 협력양상이 높다. 대북포용정책 기간인 네번째 기간에서 양자간 갈등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1.53을 기록하고 있으며, 협력지수는 최고치인 4.90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관계에서는 참여화정책 기간에 갈등양상보다는 상대적으로 협력양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간 이슈 분포를 살펴보면, 'Armed Forces and Strategy'(41.4%), 'Diplomacy'(17.2%), 'Peace and Terrorism'(10.3%)의 순으로 전체 이슈 분포에 비해서 군사력과 전략 이슈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그 다음 이슈간에는 별다른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에서도 동일관련 이슈는 입력되지 않았다.

<표 19> 북한과 러시아(소련)간 이슈분포: 1984.1~1995.4

이슈	수	%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12	41.4
Diplomacy	5	17.2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3	10.3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2	6.9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1	3.4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1	3.4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1	3.4
Crimes and Corruption	1	3.4
Security, Safety, and Order	1	3.4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1	3.4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	3.4
합계	29	100

나. 양자간 일방적 관계

북한과 러시아(소련)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우선 북한의 대러 관계의 경우 갈등 event가 22개로 러시아의 대북한 갈등 event 13개보다 많다. 또한 협력 event의 수에 있어서는 북한의 대러 협력 event가 7개로 러시아의 대북한 협력 event 14개보다 적다. 그리고 갈등지수면에서도 북한의 대러 갈등지수 -2.49가 러시아의 대북 갈등지수 -1.50보다 높으며, 북한의 대러 협력지수 3.17은 러시아의 대북협력지수 3.17과 비슷하다. 따라서 상호작용 event의 수나 지수면에서 북한의 대러관계가 러시아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

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러(소련)관계의 경우, 대러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동안 0이었다가 두번째 기간에서 -2.8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갈등지수는 다소 낮아져서 세번째 기간에 -1.92, 네번째 기간에 -2.23이다. 그리고 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 2.46, 두번째 기간 4.95이며, 그 이후에는 협력 event가 입력되지 않았다. 북한의 대러관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기간동안 최고치에 달해서 북한이 소련사회주의체제의 체제전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핵위기 기간동안 북한의 대러관계는 낮은 수준의 갈등을 보였으며, 특히 세번째 기간이후 협력 event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갈등적 입장을 나타낸다.

러시아(소련)의 일방적 대북관계를 살펴보면, 갈등지수는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 -2.50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네번째 기간에서는 -0.83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지수는 세번째 기간에서 1.45로 최저치인 반면, 네번째 기간에서는 4.90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는 북한핵개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는 대북영향력 확대를 위해 협력지향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0> 북한의 대러시아(소련)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2.46	5	2.30
2단계	-2.81	3	2.54	4.95	2	2.19
3단계	-1.92	6	2.14			
4단계	-2.23	3	2.31			
전 체	-2.49	22	2.40	3.17	7	2.27

<표 21> 러시아(소련)의 대북한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1.20	2	1.41	2.37	3	0.90
2단계	-1.15	4	1.90	2.50	4	2.68
3단계	-2.50	4	2.77	1.45	2	0.64
4단계	-0.83	3	1.18	4.90	5	3.54
전 체	-1.50	13	1.93	3.18	14	2.31

5.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서로 교착되는 상황에서 전개되어 왔다. 바꾸어 말하면, 남북한관계의 돌파구와 교착상태는 남북한간 상호작용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이것은 한반도분단과 남북한관계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 및 동북아환경과 밀접한 상호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의 돌파구는 항상 남북한 내부로부터보다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남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한관계에 대해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74년의 남북대화는 미·소대탕트와 미·중의 접근, 아시아문제의 아시아화를 천명한 닉슨독트린 등에 의해 야기된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남북한의 대응노력의 소산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세계적 차원의 격변은 남북한간 공식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부터 시작된 남북한간 공식대화는 1992년 2월 남북한간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에 의해 정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가 점진적·단계적으로 진전되기에는 남북한간 상호불신과 체제안보에 대한 상호위협이 너무 컸다. 더욱이 남북한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제약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었다.

남북한관계는 북한핵문제의 부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질적인 성격 변화를 겪었다. 북한핵문제가 내포한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바로 국제적 차원의 안보문제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은 전면 중단되고 IAEA와 북한간 및 미·북협상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핵 협상과정에서도 남한은 미국을 통한 간접적 통로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남북당사자간 협상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미·북협상 결과 남한은 대북경수지원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남북한은 국제적 중재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협상과 협력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북한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경제난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포용정책에 있어서도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간의 딜레마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해소를 위해 남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직접 요청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우회적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에서도 남한의 대북지원은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도 남북한관계의 구조적 이중성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4자회담」의 구도는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구도를 통해서 한반도평화정착의 기본구도 마련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문제는 이러한 다자구도의 진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가. 양자간 상호관계

남북한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는 총 1,126개로 미·북관계 609, 일·북관계 195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것은 북한 관련 event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양자간 상호작용의 갈등 event는 651개로 협력 event 475개보다 많다. 따라서 남북한간 상호관계의 특징은 압도적으로 갈등지향적이다. 그런데 지수면에서 보면, 갈등지수가 -2.91로 협력지수 2.84보다 높지만, 예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간 정도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높은 수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협력도 병존하는 이중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간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에 -2.20, 두번째 기간에 -2.47, 세번째 기간에 -2.37이며, 네번째 기간에서는 -4.04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의 2.13이 두번째 기간에서 3.02에 달했다. 협력지수는 세번째 기간에서 2.43으로 하락했다가 네번째 기간에서는 최고치인 3.10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 공식대화가 진행되었던 두번째 기간에서 갈등지수가 현저하게 낮지는 않았으나, 협력지수는 3.02로서 최고에 달했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동안 평균치보다 낮은 갈등지수가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에서 갈등지수가 -4.04로 최고를 기록하고, 협력지수도 최고치인 3.10을 기록함으로써 최고치의 갈등과 최고치의 협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번째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지수가 높은 원인중의 하나는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이다.

〈표 22〉 남북한간 이슈 분포: 1984.1~1995.4

이슈	수	%
Diplomacy	251	37.2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129	19.1
Self-determination/Secession	72	10.7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69	10.2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32	4.7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26	3.9
Security, Safety, and Order	18	2.7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16	2.4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	15	2.2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15	2.2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11	1.6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7	1.0
Religion-based Issues and Disputes	6	0.9
Political Legitimacy	2	0.3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2	0.3
Moral Thought and Practice(Not specifically religion)	1	0.1
Crimes and Corruption	1	0.1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1	0.1
합계	674	100

남북한간 이슈 분포를 살펴보면, 'Diplomacy'(37.2%), 'Armed Forces and Strategy'(19.2%), 'Peace and Terrorism'(10.2%)의 순으로 전체 이슈 분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남북한간 event data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남북한간 이슈 분포가 전체 이슈분포에 반영된 결과다. 그 다음 순위의 이슈는 'Self-determination/Secession'(10.7%), 'Economics and Poverty'(4.7%)이다. 특히 통일관련 이슈가 10.7%로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나. 양자간 일방적 관계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남갈등 event가 307개, 대남협력 event는 227개인 반면, 남한의 대북갈등 event는 344개, 대북협력 event는 248개이다. 따라서 event수를 기준으로 하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갈등이나 협력에 관한 입장표명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지수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남갈등지수는 -3.24로 남한의 대북갈등지수 -2.61보다 높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협력지수는 2.71이며, 남한의 대북협력지수는 2.84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남한에 비해 갈등지향적이며, 협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대남관계를 살펴보면, 첫번째 기간동안 -2.94였던 대남갈등지수는 남북대화기간인 두번째 기간에서 -2.65로 낮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갈등지수는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다시 -3.11로 높아져서 네번째 기간에서는 -3.9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동안 2.23이던 것이 남북대화기간인 두번째 기간동안 3.00으로 최고에 이르렀다. 협력지수는 세번째 기간에서 다시 낮아져서 1.78이다가 네번째 기간에서는 2.91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관계는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던 두번째 기간에서 가장 낮은 갈등지수와 가장 높은 협력지수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네번째 기간에서는 가장 높은 갈등과 평균이상의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3> 북한의 대남한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2.94	72	3.05	2.23	55	2.01
2단계	-2.65	78	2.19	3.00	84	2.34
3단계	-3.11	51	3.05	1.78	14	1.54
4단계	-3.95	106	2.09	2.91	74	2.14
전 체	-3.24	307		2.71	227	

그리고 남한의 대북한관계의 경우, 갈등지수는 첫번째 기간에서 -1.59로 가장 낮았으나 남북대화기간인 두번째 기간에서 -2.27로 다소 높아졌다. 세번째 기간에서는 -1.86으로 낮아졌으나 네번째 기간에서 -4.12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북협력지수는 첫번째 기간에서 2.04이던 것이 두번째 기간동안 3.03으로 높아졌으나 세번째 기간에서 2.72로 낮아졌다. 그리고 네번째 기간에서 3.35로 최고에 이르렀다. 남한의 대북관계는 남북대화기간인 두번째 기간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갈등지수와 최고의 협력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북포용책기간인 네번째 기간동안 가장 높은 갈등과 가장 높은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 남한의 대북한관계

관계유형 단 계	갈 등			협 력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평균지수	수	표준편차 (SD)
1단계	-1.59	88	2.33	2.04	57	1.90
2단계	-2.27	68	2.68	3.03	99	2.21
3단계	-1.86	75	2.40	2.72	31	1.96
4단계	-4.12	113	3.43	3.35	61	2.55
전 체	-2.61	344		2.84	248	

제VI장 맺음말

본 연구는 event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event data의 분석기법으로 KEDS/PANDA기법을 활용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7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을 ① 1984. 1~1988. 9: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중전략, ② 1988. 10~1993. 2: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③ 1993. 3~1994. 10: 북한핵개발과 협상, ④ 1994. 11~1997. 12: 북한의 위기와 대북포용정책 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별 특징에 따라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갈등·협력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양자관계를 양자간 상호관계와 양자간 일방적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관련 event data의 빈도 및 이슈분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북한 관련 보도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월 평균보도수는 북한핵위기 기간동안 가장 많았다. 그 이후 북한의 위기와 포용정책기간에는 핵위기 기간보다 평균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첫번째나 두번째 기간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핵문제로부터 북한의 위기 및 체제전망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별 분포를 보면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관련 event data의 소스 및 대상의 2위는 남한이며, 그 다음 순위는 미국, 일본, 국제

기구, 중국, 러시아의 순이다.

셋째, 이슈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것과 군사적 위협 및 테러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에는 일반적인 외교관계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갈등적 상황이 여전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 및 통일문제에 대한 비중은 외교관계 및 군사적 갈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은 통일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대해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주변 4국 및 남한은 경제문제보다는 통일문제에 대해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골드스타인(Goldstein)지수를 활용하여 갈등·협력양상을 지수화한 결과, 전체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2.54이며, 평균 협력지수는 2.80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면에서는 협력양상의 정도가 갈등양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1984년부터 1997년까지를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갈등·협력양상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기간은 서울올림픽과 북한의 이종전략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갈등정도와 협력정도가 다 같이 낮았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한적이었으며 갈등적 사건이나 협력적 사례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기간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대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갈등지수는 전체 평균 갈등지수보다 낮고, 협력지수는 전체 평균 협력지수보다 높았다.

세번째 기간은 북한핵위기 및 핵협상 기간이다. 이 기간의 평균 갈등지수는 전체 기간중 가장 낮고, 협력지수는 전체 평균협력지수

수준이다. 북한핵개발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에 수반된 위협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지수는 전체 기간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협력도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표면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기간은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대북포용정책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갈등지수 및 협력지수가 다같이 전체 기간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갈등과 높은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핵문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해소된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요인이 억제되지 않고 표출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견해차이와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돌발적 변수로서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은 이 기간동안 갈등요인을 증가시킨 원인중의 하나다.

이상과 같은 발견사실을 통해 갈등과 협력간 상호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한반도상황에서와 같이 갈등이 구조화된 경우, 돌발적인 갈등이나 협력양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협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정도의 갈등과 낮은 정도의 협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 2> 북한핵위기와 같이 위기의 정도가 심할 경우, 예상과는 달리 관련 당사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갈등의 정도가 평균보다 낮고,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설 3> 새로운 협력이 모색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견해차이로

인해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높은 정도의 협력과 높은 정도의 갈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다섯 쌍의 양자간 갈등·협력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첫째, 미·북관계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 관련 양자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양자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간 갈등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북양자관계는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 동안 갈등 event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갈등지수는 가장 낮고, 협력지수는 평균치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미국과 북한은 갈등적 입장을 많이 표명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으며, 타협적인 제안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미·북관계에서 갈등지수가 가장 높고 평균치 이하의 협력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미·북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미관계가 미국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향적이다.

둘째, 일본과 북한간 양자관계는 국교정상화논의가 시작된 이후 갈등지수가 감소하고 협력지수가 증가했으며, 핵위기 기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갈등과 협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 기간에서 갈등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양자간 실질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대일관계가 일본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갈등지향적이다.

셋째, 중국과 북한 양자간 상호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비공개주의 및 양자관계의 비공개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중국은 핵위기 기간에도 낮은 정도의 갈등

을 유지했다. 그리고 양자간 상호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가장 높은 갈등지수 및 협력지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상호작용 event의 수나 갈등·협력 지수의 두가지 기준에서 모두 북한이 중국보다 협력지향적이다.

넷째, 러시아(소련)와 북한간의 관계는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북한과 러시아(소련) 양자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수가 중·북간 상호작용 event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작용 event수가 적은 것은 중·북한 경우에서와 같이 양자간 관계가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실질적으로 양자간 관련 이슈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소련)·북간 상호관계는 갈등 event가 협력 event보다 많지만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지수면에서 보면, 협력양상이 상대적으로 갈등양상보다 높다. 일방적 관계에서는 상호작용 event의 수나 지수면에서 북한의 대러관계가 러시아의 대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양자간 상호작용의 event는 다섯 쌍의 양자관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북한 관련 event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남북한간에는 갈등 event수가 협력 event수보다 많지만, 실질적으로 갈등지수와 협력지수간 정도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높은 수준의 갈등이 존재함과 동시에 협력도 병존하는 이중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간 공식대화가 진행되었던 두번째 기간동안 갈등지수가 현

저하계 낮지는 않았으나, 협력지수는 최고에 달했다. 그리고 핵위기 기간인 세번째 기간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갈등지수가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네번째 기간동안 갈등지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협력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최고치의 갈등과 최고치의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네번째 기간동안 남북한간 갈등지수가 높은 원인중의 하나는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잠수함사건'이다. 양자간 일방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갈등지향적이며, 협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관련 이슈의 다차원성이다. 북한 관련 대외관계는 일반적 외교적 관계와 군사적 대립과 테러리즘과 같은 갈등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과 환경, 통일, 안보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관련 이슈들은 전통적 안보적 이슈와 경제이슈, 통일이슈 등이 상호공존하는 가운데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간의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거나 이슈들간의 상호관계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관련 대외관계의 중층적 성격이다. 북한 관련 대외관계는 여러 쌍의 양자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자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진전이 진행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의 관계진전이 추진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도 복잡한 양상을 지니면서 전개될 것이다. 기존의 양자관계가 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양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양자관계내부에서의 양자간 일방적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이

다. 기존의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협력이 진행되는가 하면, 협력에 의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요인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협력이 진전되면서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복합적 관계가 전개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배진수, 「탈냉전이후 한반도 긴장기류 분석: Event Data분석, 1989-1995」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5
- Bennett, B. and J. Bond. *The Protocol for the Assessment of Nonviolent Direct Action (PANDA) Codebook---for the preliminary data development run completed on June 1, 1994*. Cambridge: The Program on Nonviolent Sanctions,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1994.
- Bond, J. *Restructuring the Operational Codes: A Psychological Assessment of George Bush and Events Leading to the Gulf War*, West Lafayette, IN: Purdue University(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4.
- Carter, A. *Direct Action and Liberal Democrac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 Cioffi-Revilla, C. *The Scientific Measurement of Conflict Handbook of Datasets on Crises and Wars 1495-1988 A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0.
- Davies, John L. *The Global Event-Data System: Coders' Manual*, Marylan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991.
- Goldstein, J. S and J. R. Freeman. *Three-Way Street: Strategic*

- Reciprocity in Worl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Gurr, T. R. *Minorities at Risk*.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3.
- Hudson, V. 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Lofland, J. *Protest Studies of Collective Behavior and Social Movements*.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1.
- McClelland, C. A. *World Event/Interaction Survey Codebook*. (ICPSR 5211). Ann Arbor: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76.
- Merritt, R. L., R. G. Muncaster & D. A. Zinnes. eds., *International Event-Data Developments: DDIR Phase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Schrodt, P. A. *Kansas Event Data System: KEDS, version 0.6B2*. Lawrence: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1994.
- Sharp, G.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Publishers. 1973.
- Singer, J. D. and M. Small. *The Wages of War 1816-1965 A Statistical Handbook*. N.Y.: John Wiley & Sons, 1970.
- Vincent, J. E. *Project Theor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 Wilson, J. Q. *Political Organizations*. N. Y.: Basic Books, 1973.

2. 논 문

- Bond, D. and B. Bennett. "The Practice of Democracy: Global Patterns and Processes in 1990," (A Paper Presented at the XVI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 Berlin, 1994).
- Bond, D., S. Lee and K. Rothkin. "PANDA's Early Warning's on Conflict."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in Chicago. 1995).
- Bond, D. "Nonviolent Direct Action and the Diffusion of Power." in P. Wehr, H. Burgess & G. Burgess. eds., *Justice Without Viole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4.
- Bond, D. and B. Bennett, W. B. Voegelé, et al. "Interaction Events Data Development Using Automated Human Coding."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1994).
- Chilton, P. "Social Movements, Transnational Coalitions,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es in Eastern Europe." in D. Bond, J. Bond & Y. Kim eds., *Nonviolent Sanctions Seminars: Fall 1992 Synopses*. Cambridge: Program on Nonviolent Sanctions, CFIA, Harvard University, 1992.
- Eberstadt, Nicholas, Marc Rubin, and Albina Tretyakova, "The Collapse of Soviet and Russian Trade with the DPRK, 1989-1993: Impact and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 Eisinger, P. K.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VII: 1 (March 1973).
- Gerner, D. J. and P. A. Schrodt, "Foreign Policy Interactions in the Middle East: An Initial Examination of Three Cases of Conflict."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Washington, D. C., 1994).
- Gerner, D. J., P. A. Schrodt, R. A. Francisco & J. L. Weddle. "The Analysis of Political Events using Machine Coded D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No. 1 (1994).
- Goldstein, J. S.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1992).
- McClelland, C. A. "Let the User Bewar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No. 2 (1983)
- Schrodt, P. A. and S. G. Davis. "Techniques and Troubles in the Machine Coding of International Event Data."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Washington, D. C., 1994).
- Walker, S. G, D. Bothlin, R. Boos, D. Cownie, H. Nakajioma, and T. Wilson, "Evidence of Learning and Risk Orientation during International Crises: The Munich and Polish Cas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4 (1984).
- Wallenstein, P. and K. Axell. "Conflict Resolu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1989-93."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1 No. 3 (1994).

Wallensteen, P. and K. Axell. "Armed Conflict at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0 No. 3 (1993).

부 록

<부록 1> PANDA Agent Codes

code agent description

IGO	all inter-governmental and transnational State organizations and agencies; includes all UN bodies and all other formal international regimes, coalitions and treaty alliances
EMB	official ambassadors, envoys and related personnel at embassies, missions & consulates
EXE	national civilian executive leaders and officials currently serving in office
JUD	judicial officers and courts, at any level of government
LEG	legislative bodies and representatives, at any level of government
LOC	local(sub-national) level gvnt. leaders & bodies(mayors, governors, town councils)
MIL	military officers, units, troops, academies, border guards & militias, including reserves
PAR	party officials, leaders, groups, candidates(both ruling and opposition)
POL	police, prison, crowd control & law enforcement personnel, at any level of government
ROY	royal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country leaders
ACA	academic institutions, administrators and faculty, except military
AGE	people identified by their age (baby, boy, girl, youth, adult)
BUS	business leaders, individual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CEL	celebrities, especially sports/entertainment, not otherwise classified

- DEX deposed and exiled leaders and their families, individuals, groups, and peoples (leaders ousted by means other than elections, i.e. coups, revolts)
- EXP “experts,” consultants, scientists and critics, speaking as experts or advisors
- FOR foreign-born citizens, immigrants, emigrants
- GUR armed opposition (guerrilla) leaders, groups, individuals engaged in armed insurrection
- HOS hostages, political and otherwise, and including former hostages
- LAB labor leaders, unions, groups, individuals
- MED media outlets, journalists, reporters, publications, radio/tv stations
- PRI prisoners, detainees, and the like, political and criminal, but not hostages
- PRO professional and trade groups, individuals, leaders, includes authors
- REF refugees, people seeking asylum or displaced from their homes
- REL religious leaders, groups, organizations, churches, sects, cults, individuals
- SEX people identified by their sexual orientation or preference
- STU students, student groups and leaders
- residual categories*
- GOV all government agencies/officials not specified above, including former but not deposed
- NGO all nongovernmental formal organizations not specified above
- GRP all nominal groups & crowds/gatherings not specified above & not identifiable as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 MAL all masculine plurals not specified above (men, man)
- FEM all feminine plurals not specified above (women, woman)
- NOM all gender-neutral plurals not specified above (people, tourists, motorists)

<부록 2> PANDA Issues

*RESOURCES AND THEIR ALLOCATION***B ECONOMICS, CLASS, POVERTY, AND ECONOMIC DISPARITY**

economic conditions and standards of living; labor and professional strikes; all budgetary considerations and monetary policy; inflation; compensation disputes; looting and stealing not reported as a crime; taxes,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hunger, unemployment, caste systems; job training; poverty; economic justice; homelessness; soup kitchens; emergency aid; starvation; welfare

F FINANCE, BANKING, TRADE, AND ALL ECONOMIC TRANSACTIONS

financial activities, including bankruptcies, investments, takeovers, loans, and financial assistance; tariffs; interest rates; and all commercial exchanges except arms transfers

N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all environmental concerns; ecology; natural resources; pollution; endangered species; toxic wastes; overpopulation; waste disposal and cleanup; offshore drilling; nuclear accidents; ancestral or native land resource conflicts; radiation; poaching; habitats

*VALUES AND IDEAS***R RELIGION-BASED ISSUES AND DISPUTES**

all inter-religious and intra-religious conflicts;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freedom of religion; fundamentalism; 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ion

T MORAL THOUGHT AND PRACTICE (NOT SPECIFICALLY RELIGIOUS)

abortion; obscenity; censorship; morality; non-religious and unspecified conscientious objection

K IDEOLOGY, PHILOSOPHY, AND SYMBOLIC ISSUES

communism; socialism; anarchism; democracy

RIGHTS AND SERVICES

H HUMAN, MINORITY, AND GENDER-BASED RIGHTS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equal pay; torture; custody issues; racism; apartheid; boat people; treatment of refugees; forced repatriation; native peoples' rights; civil rights; treatment of hostages

E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PUBLIC SERVICES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public health; AIDS and other epidemics; classroom conditions; teaching; the arts; scientific research; child care

CRIMES AND LEGAL PROCESSES

D DUE PROCESS, LEGAL PROCEDURES, AND CIVIL LIBERTIES

all legal/judicial procedures, including sentencing, state executions, incarceration, extraditions, trials, appeals, rendering of judgments, and the granting of amnesty; for arraignments and arrests, the charge itself (e.g. corruption/crime) is coded, but all subsequent legal proceedings are coded as due process

U CRIMES AND CORRUPTION

drug trafficking; bribery; arson; drunk driving; thefts; racketeering; muggings; murder

CONFLICT

C COMMUNAL STRIFE AND ETHNIC CONFLICT

factional and regional fighting; ethnic conflict; civil war not otherwise specified

M ARMED FORCES, WEAPONS, AND STRATEGY

military exercises; troop deployment; defense and deterrenc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recruiting and training; military aid/arms transfer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ilitary engagements not otherwise specified

S SECURITY, SAFETY, AND ORDER

espionage; spying; curfews; police actions to quell uprisings/riots; closing borders; law and order; crackdowns on demonstrations; social and political order

PEACE, VIOLENCE, AND TERRORISM

P hostage-taking and rescuing, kidnapping, massacres, extermination, death threats, killings, cease-fires, truces, dismembering, gun control, aggression; violence not otherwise specified

GOVERNANCE

G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ACTIVITY

competing claims by groups within a government or electoral system; elections;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ballots; coalitions; voting; election campaigns; electoral reform

J POLITICAL LEGITIMACY

competing claims of authority and legitimacy; anti-government movements; calls for resignation; giving up sovereignty; ceding power; revolutionary change and rebellions not otherwise specified--the conflict or issue is over the governing system itself

A SELF-DETERMINATION/SECESSION

independence; independence movements; separatism; unification; reunification; also used as default for ongoing independence movements (e.g. the Palestinian Movement) when no other issue is specifically identified

L DIPLOMACY

diplomatic exchanges, visits, meetings, and discussions; resumption of relations; alliances, issues of formal recognition; tours; summits; talks; also used as the default categor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no other issue is identified and when there is no threatened or actual use of use of military force

blank ALL OTHER ISSUES AND ISSUES NOT SPECIFICALLY IDENTIFIED

<부록 3> WEIS--to--KEDS/PANDA
Cross-Listing of Event Categories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original WEIS categories are in italics

<u>WEIS</u>	<u>categories (N=83, including 22 "cue" categories)</u>	<u>KEDS/ PANDA</u>	<u>categories (N=159)</u>	Goldstein weight
01	yield010	all yielding not specifide below	
011	surrender, yield to order011	surrender, yield to order	0.6
012	yield position, retreat, evacuate012	yield position, retreat, evacuate	0.6
013	admit wrongdoing, retract statement013	admit wrongdoing, retract statement	.2.0
		014	<i>cede power</i>	
02	comment	050	all comments not specified below	
021	explicit decline to comment051	explicit decline to comment	-0.1
022	comment on situation-- pessimistic	052	comment on situation-- pessimistic	
023	comment on situation--neutral053	comment on situation--neutral	-0.2
024	comment on situation-- optimistic	054.....	comment on situation--optimistic	
025	explain policy or future position055	explain policy or future position	0.0
		056	<i>acknowledge or claim responsibility</i>	
03	consult090	<i>all consults not specified below</i>	
031	meet at neutral site, send note091	meet(at any site), send note, discuss	1.0
032	visit, go to092	visit, go to	1.9

033	receive visit, host	093.....receive visit, host	
		094 <i>vote, elect</i>	2.8
04	approve130 <i>all approvals not specified below</i>	
041	praise, hail131 <i>praise, endorse, or defend a person</i>	3.4
042	endorse other policy or position132 <i>praise, endorse, or defend a policy or position</i>	3.6
05	promise170 <i>all promises not specified below</i>	
051	promise own policy support171 <i>promise own policy support</i>	4.5
052	promise material support	172.... <i>promise economic support</i> 173 <i>promise military support</i> 174 <i>promise humanitarian support</i>	5.2
053	promise other future support action [maps to 170, 173, & 174]	4.5
054	assure, reassure175 <i>assure, reassure</i>	2.8
06	grant210 <i>all grants not specified below</i>	4.5
061	express regret, apologize211 <i>express regret, apologize</i>	1.8
062	give state invitation212 <i>extend invitation (not limited to state invitations)</i>	2.5
063	grant asylum213 <i>grant asylum</i>	-1.1
064	grant privilege, diplomatic recognition, etc.	214.... <i>grant privilege (any improvement in relations)</i>	5.4
065	suspend negative sanctions, truce215 <i>suspend negative sanction (see 223 for truce)</i>	2.9

066	release or return persons or property216	release or return persons or property	1.9
		217	<i>grant amnesty</i>	
		218	<i>disarm or reduce military (force levels)</i>	
		219	<i>appoint, give award</i>	
		221	<i>render legal judgment</i>	
		222	<i>grant rights</i>	
		223	<i>truce, cease-fire</i>	
		224	<i>protect, shelter, give sanctuary</i>	
07	reward250	<i>all rewards not specified below</i>	
071	extend economic aid251	extend economic aid	7.4
072	extend military aid252	extend military aid	8.3
		253	<i>extend humanitarian aid</i>	
073	extend other assistance	<i>[maps to 250 & 253]</i>	6.5
08	agree290	<i>all agreements not specified below</i>	
081	make substantive agreement291	<i>make formal, substantive agreement</i>	6.5
082	agree to future action or procedure292	agree to future action or procedure	3.0
		293	<i>ally</i>	
		294	<i>merge, integrate</i>	
		295	<i>economic transaction</i>	
		296	<i>agree to meet (in the future) or negotiate</i>	

09	request330	<i>all requests not specified below</i>	
091	ask for information331	ask for information	0.1
092	ask for policy assistance332	ask for policy assistance (include lobbying)	3.4
093	ask for material assistance333	<i>ask for economic assistance</i>	3.4
			334 <i>ask for military assistance</i>	
			335 <i>ask for humanitarian assistance</i>	
094	request action, call for336	request action, call for	-0.1
095	entreat, plead337	entreat, plead (includes judicial appeals)	1.2
			338 <i>request policy change</i>	
			339 <i>request rights</i>	
			341 <i>public petition</i>	
10	propose370	<i>all proposals not specified below</i>	
101	offer proposal371	offer proposal	1.5
102	urge or suggest action or policy372	urge or suggest action or policy	-0.1
11	reject410	<i>all rejections not specified below</i>	
111	turn down proposal, reject protest, etc.411	turn down proposal, reject protest, etc.	-4.0
112	refuse, oppose, refuse to allow412	<i>refuse, refuse to allow (see 421 for oppose)</i>	-4.0
			413 <i>defy law, customs or norms</i>	
			414 <i>flee, protest emigration</i>	

	415	<i>ignore, isolate, ostracize</i>	
	416	<i>give up, renounce, resign</i>	
	417	<i>supersede, establish parallel institutions</i>	
	418	<i>disclose information, "outing"</i>	
	419	<i>prohibit or ban action or activity</i>	
	421	<i>oppose, disagree</i>	
	422	<i>abolish capital/corporal punishment</i>	
12	accuse450	<i>all accusations not specified below</i>
121	charge, criticize, blame451	<i>charge (excluding judicial), criticize, blame</i> -2.2
122	denounce, denigrate, abuse452	<i>denounce, denigrate, abuse (excluding sarcasm)</i> -3.4
		453	<i>investigate, search for</i>
		454	<i>indict (judicial)</i>
		455	<i>litigate (both prosecution and defense)</i>
		456	<i>satirize, mock</i>
13	protest490	<i>all protests not specified below</i>
131	informal complaint491	<i>informal complaint</i> -1.9
132	formal complaint or protest492	<i>formal complaint or protest</i> -2.4
		493	<i>self-risk protest (includes protest suicides)</i>
		494	<i>visual protest</i>
		495	<i>sound, audio protest</i>

		496	<i>dramatic performance</i>	
			<i>protest</i>	
14	deny530	<i>all denials not specified below</i>	
141	deny an accusation531	deny an accusation	-0.9
142	deny an attributed policy, action or position532	deny an attributed policy, action or position	-1.1
15	demand570	<i>all demands not specified below</i>	
150	issue order, insist on compliance571	<i>[demand]</i> , issue order, insist on compliance	-4.9
			572 <i>claim rights</i>	
16	warn610	<i>all warnings not specified below</i>	
160	give warning611	<i>[warn]</i> , give warning	-3.0
			612 <i>warn of common danger, mutual problem</i>	
17	threaten	650.....	<i>all threats not specified below</i>	
171	threat without specific negative sanctions651	threat without specific negative sanctions	-4.4
172	threat with non-military negative sanction	652.....	<i>threat with negative sanctions (no physical force)</i>	-5.8
173	threat with force specified	653.....	<i>threat with physical force specified</i>	-7.0
174	ultimatum, time limit specified654	ultimatum <i>[report of time limit not necessary]</i>	-6.9
18	demonstrate690	<i>all demonstrations not specified below</i>	

181	non-military demonstration, walk-out on691	<i>non-military demonstration [see 738 for walkout]</i>	-5.2
182	military mobilization, exercise, or display692	<i>military mobilization, exercise, or display</i>	-7.6
		693	<i>rally, celebration</i>	
		694	<i>procession</i>	
		695	<i>picket</i>	
		696	<i>commemoration, vigil</i>	
19	reduce relationships730	<i>all reducing relationships not specified below</i>	
191	cancel or postpone planned events	731....	<i>cancel or postpone events</i>	-2.2
192	reduce routine international activity732	<i>reduce (any) routine activity</i>	-4.1
193	reduce or halt aid733	<i>reduce or halt aid</i>	-5.6
194	halt negotiations734	<i>halt negotiations</i>	-3.8
195	break diplomatic relations and/or declare war735	<i>break diplomatic relations (see 754 for war)</i>	-7.0
		736	<i>cancel</i>	
		737	<i>withdraw from, walk out on</i>	
		738	<i>impose sanctions, embargoes</i>	
		739	<i>disrupt, subvert, overload</i>	
		741	<i>delay, slow down</i>	
		742	<i>impose curfew</i>	
		743	<i>employee lockout</i>	
		744	<i>boycott, social and/or political</i>	

	745	<i>boycott, economic</i>		
	746	<i>occupational (labor) strike</i>		
	747	<i>withhold services</i>		
	748	<i>withhold materials</i>		
	749	<i>general strike</i>		
	751	<i>physically block action, obstruct, stop, blockade</i>		
	752	<i>layoff, furlough, suspend</i>		
	753	<i>ban organization</i>		
	754	<i>declare war</i>		
20	expel770	<i>all expulsions not specified below</i>	
201	order personnel out of country771	<i>order personnel out of country</i>	-5.0
202	expel organization or group772	<i>expel organization or group</i>	-4.9
		773	<i>fire personnel</i>	
21	seize810	<i>all seizures not specified below</i>	
211	seize position or possession811	<i>seize possession [see 815 for seize position]</i>	-9.2
212	detain or arrest persons812	<i>detain or arrest persons</i>	-4.4
		813	<i>hijack, kinnap</i>	
		814	<i>seize information, spy</i>	
		815	<i>seize position, non-occupation</i>	
		816	<i>extradite</i>	
		817	<i>military occupation</i>	
22	force		

221 non-injury destructive act[maps to 850-851]	-8.3
222 non-military injury-destruction [maps to 860-863 & 870-871]	-8.7
223 military engagement [maps to 880-882]	-10.0
	<i>850 all other/unspecified physically destructive actions (see 851 context)</i>	
	<i>851 bombings, burnings (not in a military battle context)</i>	
	<i>860 all other/unspecified body assaults;</i>	
	<i>861 beatings, muggings & other sub-lethal physical assaults on bodies; includes corporal punishment</i>	
	<i>862 lethal body assaults, all murders, executions, & assassinations; includes capital punishment</i>	
	<i>863 "disappearings" & torture</i>	
	<i>870 all other/unspecified clashes & violent fighting 882 armed forces interventions, battles, insurrections</i>	
	<i>871 riots and violent demonstrations</i>	
	<i>880 all other/unspecified armed forces uses of force</i>	
	<i>881 armed forces coups, mutinies</i>	
	<i>882 armed forces interventions, battles. insurrections</i>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FAX:901-2547)

